



2024. 12. 31.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정책 | 제163호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보고서 및
북한·남북관계센터 정책보고서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와 도전

: 주요국 정책 기조와 전망

김도희·이승열·김예경·박명희·심성은 |
입법조사관(외교안보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입법·정책 제163호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보고서 및 북한·남북관계센터 정책보고서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와 도전

: 주요국 정책 기조와 전망

김도희·이승열·김예경·박명희·심성은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24. 12. 31.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입법·정책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4. 12. 31.)되었습니다.

요 약

-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적 안보환경과 평화체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국제질서 변화와 그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대응이 한반도에 대한 각국의 기조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탈냉전의 종언과 함께 부활한 강대국 경쟁은 한반도에 냉전적 경쟁 구도를 재현하였고,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전략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음. 트럼프의 귀환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활발하게 소통했던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냉각된 이래 윤석열 정부(이하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단절되었음
-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거부함. 또한,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였음
- 윤 정부가 수차례 계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남하와 GPS 전파교란 공격을 이

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마침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음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 일 만인 2021년 4월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 를 선언하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대북정책 기조로 발표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북한과의 양자 외교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 하였고, 트럼프 1.0과는 달리 북한과의 직접 협상 대신,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과 확장억제의 보장에 더 무게를 두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독자적인 제 재를 유지하였음
-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 강 화와 핵 및 전략기획 토의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써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에 합의하였음
 - 2024년 7월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통합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함
-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 제 해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소위 ‘한반도 3원칙’을 강 조해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이와 같은 한반도 기조는 지속되어왔음

-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6자회담 등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음. 또한 북한의 상황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쌍궤병행((双轨并进·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체제 전환)’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음
 - 한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레드라인(红线)’으로 설정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한일 양국 관계는 역사문제로 인하여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2024년 일본 『외교청서』(外交青書)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기하고, 최근 인도·태평양의 엄격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현재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피력함
- 일본 정부는 2024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8.18) 기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 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은 2002년 9월 발표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일본은 북한에 의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UN 결의안에 의한 조치 및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음
 - 2021년 10월 기시다(岸田文雄) 정권 출범 후 납치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나, 북한

은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음

-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밀착되고 있음. 2024년 초까지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2024년 중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과 군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북한과의 외교·안보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6월, 푸틴(V. Putin)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음
 - 이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국가가 전시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 국가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무기와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2년 11월 한-러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 2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경제 및 외교 협력을 도모하였음
 - 그러나,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하여 러시아가 한국 기업 및 개인들과 거래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제하였음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반도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 세력 결집과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양상은 미중경쟁 심화와 러우전쟁 발발이라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추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신냉전 체제’ 선언 및 북중러 협력 강화의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음

-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1945년 냉전의 산물로 분단되었고,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냉전적 구조가 유지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남아있음
- 세계 주요국들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계와 전문가 그룹 내에서 이러한 진영화 추세를 신냉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현재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이들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진영화 양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였음
- 반면,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로 나뉜 진영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김정은은 2023년 1월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음. 이에 대한 근거로서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과의 3각 공조 실현”을 추진하여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그 결과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최대의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규정하였음
-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이번 회담은 한미, 미일, 한일 등 양자관계의 연계를 넘어, 3국이 직접적인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첫 회의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한일 간 역사문제와 더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맹 관리 역량과 의지임.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국력은 쇠퇴한 반면 한국과 일본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동맹 간 협력 범위는 더욱 포괄적으로 확장됨으로써 격자형 소다자 동맹의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음
 - 다만, 미국의 전략에는 자국 우선주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맹 간 국익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더욱 고도화되었음. 또한, 중러를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지속되다가 2023년 이후 더욱 공고화되었음
-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국을 북중러 삼자 협력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나, 중국은 여전히 삼각 공조보다는 양자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북중러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북중러 협력이 중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한미일 협력과 유사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음

-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0의 대 한반도 정책을 예측해보면, 한미동맹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북미 관계에서는 정상외교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발효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2026년 ~ 2030년)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트럼프 2.0 초반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는 재집권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해 김정은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3차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트럼프의 기대처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더 적게 양보하고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 북러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파병을 통해 학습효과를 얻는 가운데,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의 전쟁 수행 목표가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력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음
- 중국은 ‘한반도 3원칙’ 기조 하에 ‘쌍궤병행’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방안을 제기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함. 그러나 북핵 문

제로 인해 국경 지역의 혼란 등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여 단호한 대응을 시사함

○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북핵 문제의 논의와 해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하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

○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와 소통도 이어가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2024년 10월 이시바(石破茂) 내각이 출범한 바 이시바 총리의 북일관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시바 총리는 납치피해자의 조기 귀국 및 북한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구상을 오랜 기간 밝힌 바 있음

○ 최근 일본 정부는 2025년 1월 제2기 트럼프(Donald John Trump) 정권이 출범하게 된 것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호기(好機)로 판단하고, 트럼프 정권에 납치피해자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함

○ 이에 우리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와는 별도로 납치피해자 문제가 존재하는 북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북한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북러 협력 강화로 인해 여러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북러 협력 강화는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대한 부정적 영

향, △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효과 감소, △ 러시아와 북한의 체제 안정성 강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하여 △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교류는 유지하는 전략 모색, △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와 무역 확대 도모, △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축소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및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 제재와 무관한 과학기술,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모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경쟁의 심화와 러우전쟁의 지속은 각국 간 협력과 갈등을 통해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라는 진영화의 양상을 초래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진영화는 과거 냉전 시기의 견고한 진영 대결과는 달리 완벽히 분리된 형태가 아니며, 한미일과 북중러 진영 내에서도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하여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트럼프 2.0 출범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진영화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논하기는 상당히 요원함
- 다만,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인식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평가하고 이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25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0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활용하여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선뜻 북미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

-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트럼프 2.0의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 / 4

| | |
|--|----|
| 1. 남북한 관계 | 4 |
| 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 4 |
|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체계 | 4 |
| (2)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 5 |
| (3) ‘담대한 구상’의 특징과 한계점 | 7 |
| 나.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 8 |
| (1) 한반도 두 국가론 선언과 민족 통일론 폐지 | 8 |
| (2) 대남 적대 국가 선언 | 9 |
| (3) 대남·대미를 겨냥한 핵무력 고도화 정책 | 10 |
| 2. 미국 | 12 |
|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 12 |
| (1)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 | 12 |
| (2) 대북제재 유지 및 인권문제 강조 | 13 |
| 나. 비핵화 및 확장억제 정책 | 14 |
| (1) 대북정책 공조와 비핵화 | 14 |
| (2) 확장억제 정책 | 16 |
| 3. 중국 | 18 |
| 가. 대한반도 정책 기조: 한반도 3원칙 견지와 핵심이익 수호 | 18 |
| (1) 한반도 3원칙 견지 | 18 |

| | |
|--------------------------------------|----|
| (2) 중국의 건설적 역할 강조 | 19 |
| (3)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 23 |
| 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쌍궤병행’ 등 중국방안 | 24 |
| 4. 일본 | 26 |
| 가. 한반도 정책기조 | 26 |
| (1) 일본의 대한국 정책기조 | 26 |
| (2) 일본의 대북한 정책기조 | 28 |
| 나. 일본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 29 |
| (1) 일본의 대한국 주요 정책 | 29 |
| (2) 일본의 대북한 주요 정책 | 33 |
| 5. 러시아 | 36 |
| 가. 대북정책 | 36 |
| (1) 러우전쟁과 북러 협력 강화 배경 | 36 |
| (2) 북러 외교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 38 |
| 나. 대(對)한국 정책 | 41 |
| (1) 한러 간 외교안보 관계 | 41 |
| (2) 경제·사회적 관계 | 42 |

Ⅲ.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 / 44

| | |
|-------------------------------|----|
| 1. 진영화와 신냉전 | 44 |
| 가. 한반도의 특수성과 진영화 양상 | 44 |
| 나. 북한의 ‘신냉전 체제’ 선언 | 46 |
| 2. 한미일 대 북중러 협력 | 49 |
| 가. 한미일 협력 | 49 |
| (1) 한미일 협력의 의의 | 49 |
| (2) 한미일 3국 협력의 영향요인과 전망 | 50 |

| | |
|----------------------------------|----|
| 나. 북중러 협력 | 52 |
| (1)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를 통한 긴장 고조 | 52 |
| (2) 중러 협력과 대북지지 | 53 |
| (3) 북중관계와 북중러 3국 협력의 가능성 | 56 |

IV. 트럼프 2.0과 한반도 정세 전망 / 58

| | |
|-------------------------------|----|
| 1. 트럼프 2.0과 남북한 관계 전망 | 58 |
| 가. 트럼프 2.0과 한미동맹의 의제 | 58 |
| 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 60 |
| 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 61 |
| 2.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및 과제 | 62 |
| 가. 중국 | 62 |
| (1)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 62 |
| (2) 시사점 및 대응 과제 | 64 |
| 나. 일본 | 65 |
| (1) 국내 정세 변화와 대한반도 정책 | 65 |
| (2) 대응과제 | 67 |
| 다. 러시아 | 69 |
| (1) 북러관계 | 69 |
| (2) 한러관계 | 69 |

V. 결론 / 71

□ 참고문헌 / 73

표 차례

| | |
|----------------------------|----|
| [표 1]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 | 35 |
| [표 2]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 43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체계 | 5 |
| [그림 2]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 7 |
| [그림 3] 1주당 러시아군 사망자 수 추이 | 37 |

I. 서론

미중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탈냉전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냉전의 승리 이후 영원할 것만 같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2022년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날로 심화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 더욱 약화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푸틴(V. Putin) 대통령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력으로 현재의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었으며, 앞으로의 혼란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3년 말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주요국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유지의 관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과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과 미중경쟁의 심화로 인한 현상타파의 측면이 병존하는 상황으로 분석하면서, 각국이 “국가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국제질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질서에 대한 각국의 인식 변화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도출하였다.¹⁾

1)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미중 패권전략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장기과제 2년차 연구와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그리고 바로 이 쟁점으로부터 이번 보고서가 시작되었다.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히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적 안보환경과 평화 체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질서 변화와 그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대응이 한반도에 대한 각국의 기조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국제적 역학관계와 그들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변화해왔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자국의 패권적 위치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맞서며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확대하면서 미국과 협력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들이 그동안 한반도 정세의 특징적 양상을 형성하며, 냉전적 대립 구도 속에서 협력과 갈등의 복합적 형태를 만들어 냈다.

최근 미중경쟁 심화와 진영화 양상으로 인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이 요원한 가운데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을 파병하였으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식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서 신냉전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탈냉전의 종언과 함께 부활한 강대국 경쟁은 한반도에 냉전적 경쟁 구도를 재현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편승하여 전략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비록 과거와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심층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 보고서는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각국 인식의 특징과 쟁점을 도출하였음. 이승현·김도희·김예경·심성은·박명희·이승열,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미래연구원, 2023.12.

같은 패권적 리더십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기에 트럼프의 귀환이 국제질서의 변화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와는 다른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이하 ‘트럼프 1.0’)에서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최근 대선 유세 기간에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왔기에 그의 재집권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남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

1. 남북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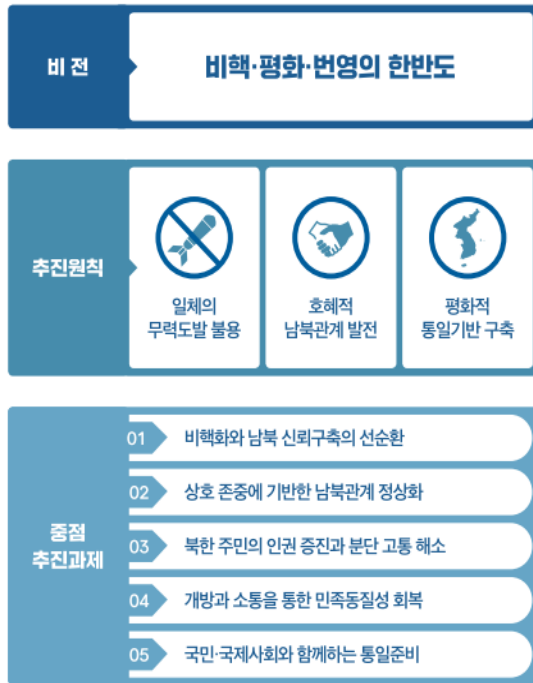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활발하게 소통했던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냉각된 이래 윤석열 정부(이하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단절되었다.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거부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였다. 윤 정부가 수차례 계속된 북한의 오물풍선 남하와 GPS 전과교란 공격을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아예 9.19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마침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체계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을 3대 추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체계



자료: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2022.11, p.11.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진과제들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93번(북한 비핵화 추진), 94번(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번(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내용은 이후 발표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단계별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2)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

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마침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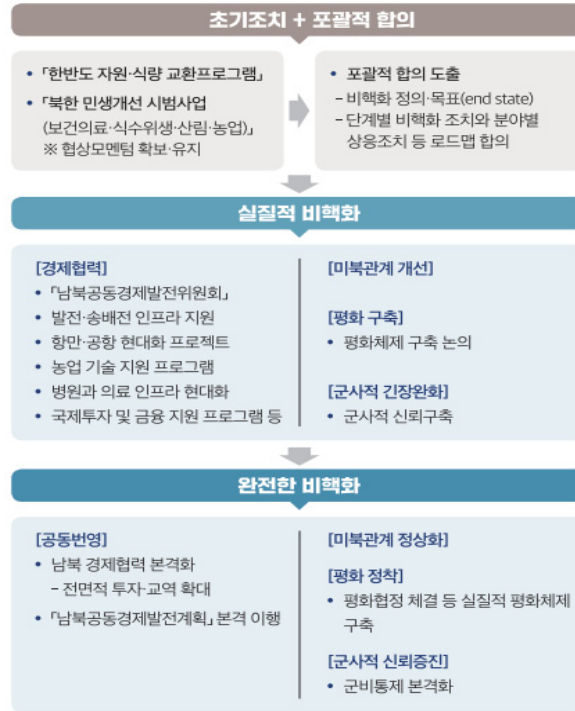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정치·경제·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으로 규정하였다. 담대한 구상은 초기 조치로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공급프로그램과²⁾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을 대상으로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³⁾ 등을 비핵화 협상 단계에서 시작한다. 그 이후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의 5대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5대 사업은 ①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③ 농업기술 지원, ④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⑤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로 구성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남북간 협력사업 협의·조정을 위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 설립하도록 한다([그림 2] 참조).⁴⁾

2)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 R-FEP)은 제재대상인 북한 광물 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이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임.

3) 「북한민생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협력사업을 시범추진한 후에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4)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2022.11.

[그림 2]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자료: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2022.11., p.21.

(3) ‘담대한 구상’의 특징과 한계점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의 초기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조치에 상응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도록 한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이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조치를 포괄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남북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중장기적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총체적 구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⁵⁾

윤 정부 측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초점을 두고, 협상의 초반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과감한 제안”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과거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⁶⁾

나.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1) 한반도 두 국가론 선언과 민족 통일론 폐지

북한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한반도 질서를 부정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전환을 시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였다.⁷⁾ 또한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과 남북교류와 관련된 상징물 철거를 지시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여 선대의 유훈인 조국 통일론마저 폐지하였다.⁸⁾

이에 김일성·김정일 시기 통일을 목표로 만들었던 대남관련 기구들이 대거 정리·개편되었다. 김일성 시대 통일 상징물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철거를 시작으로 북한의 통일론과 대치되는 흡수통일을 국가 정책으로 정한 《대한민

5) 한동호 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22-04, 통일연구원, 2023, p.25.

6) 권호·정영교, 「북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의 극치”」, 『중앙SUNDAY』, 2022.8.20.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문」, 『로동신문』, 2023.12.31.

8) 「80년 북남관계 종지부」, 『조선중앙통신』, 2024.1.16.

국》과는 더는 통일을 논의할 수 없다며,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였다.⁹⁾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지시대로 2024년 10월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개정된 헌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대적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의 두 개 국가 선언과 통일론의 폐지는 그의 주장처럼 지난 80년간 남북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행위이며,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여 남북의 민족적 동질성마저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 시기 통치 명분이었던 통일론마저 폐지하고,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김정은의 ‘위협인식’(perception of threats) 때문이다.

(2) 대남 적대 국가 선언

북한의 대남 적대시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기는 2022년 5월 윤 정부가 등장한 이후부터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매우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⁰⁾ 이에 2021년 제8차 당대회까지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남북관계는 “3년전의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¹¹⁾

9) 위의 기사.

10)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 4. 13.

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대회 관련 보도」, 『로동신문』, 2021.1.13.

하지만 김정은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직후 열린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부터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밝히면서, 국방력 강화 방안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2년 10월 10일 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대남 핵공격을 위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장면을 보도하면서 한미군사훈련과 대남 군사시설 타격을 목표로 삼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¹²⁾ 더 나아가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 사용의 조건을 구체화한 핵태세 확립 방안을 법제화하였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적대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였다. 2024년 1월 8일 대한민국 합참이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한 대응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자,¹³⁾ 김정은은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¹⁴⁾ 이것은 북한의 해상 포격 훈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양측의 사소한 물리적 충돌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3) 대남·대미를 겨냥한 핵무력 고도화 정책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 추진”을 선언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그리고 전술무기화를 통해 대남 전술핵의 투발 수단인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10.10.

13) 이민아, 「합참, 북 9·19 3600여회 위반..더는 완충수역 존재않아」, 『조선일보』, 2024.1.8.

14) 「80년 북남관계 종지부」, 『조선중앙통신』, 2024.1.16.

완성했다고 밝혔다.¹⁵⁾ 더 나아가 미국을 겨냥한 5대 핵무기인 극초음 활공체, 지상 고체 ICBM,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전략핵무기,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의 조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¹⁶⁾

북한은 2023년 4월 한미 당국의 ‘위싱턴선언’ 직후 5월 31일 김정은의 공언대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 발사를 감행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실패하였다.¹⁷⁾ 이에 김정은은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위성 협력을 본격화하였다.¹⁸⁾ 그 결과 2023년 11월 북한은 세번째 발사 끝에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우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분으로 ICBM 기술을 우회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하여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지상 기반 고체연료 ICBM인 ‘화성-19형’을 발사하였다. 『조선중앙TV』는 화성-19형이 “최대 정점 고도 7천68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천1.2km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다”고 보도했다.¹⁹⁾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의 방향은 먼저 대남 전술핵 공격 기반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ICBM 발사를 통해 대미 핵 억제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16) 위의 기사.

17) 「군사정찰위성발사시 사고 발생」, 『조선중앙통신』, 2023. 5. 31.

18) 류재민, 「푸틴, 김정은과 군사협력 논의..인공위성 개발 도울 것」, 『조선일보』, 2023.9.13.

19) 「화성-19형 시험 발사 관련 보도」, 『조선중앙TV』, 2024.10.31.

2. 미국

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 일 만인 2021년 4월 30일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대북정책 기조로 발표하였다.²⁰⁾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이 기조는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달성하는 것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따르는 것도 아니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달성을 목표로 외교적인 대화에 열려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²¹⁾ 이 기조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2021년 5월 21일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U.S. Special Envoy to North Korea)로 임명하였다.²²⁾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화 재개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거나, 비핵화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 없이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대화를 재개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시도를 사실상 무시해왔다. 북한의 무관심과 무대응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안하여 북한을 대화

20) Betsy Klein, “Biden administration completes North Korea review process, will pursue ‘calibrated’ diplomacy”, *CNN*, 2021.4.30.

21) Alana Wise, “White House Says It Is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npr*, 2021.4.30.

22) Alana Wise, “Biden Appoints Career Diplomat Sung Kim To Serve As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npr*, 2021.5.21. 2023년 말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이후 정 박(Jung H. Pak) 대북고위관리(The U.S. Senior Official for the DORK) 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U.S. Department of State. Dr. Jung H. Pak(최종 검색일: 2024.7.4.), <<https://www.state.gov/biographies/jung-h-pak/>>.

로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비핵화를 위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²³⁾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이든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2) 대북제재 유지 및 인권문제 강조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우선순위가 낮았던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였다.

북한은 현재 수십 개의 미국의 독자 제재 및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한때 판매할 수 있었던 품목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석유 등 중요 필수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2017년 및 2019년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P.L. 114-122, P.L.115-44, P.L. 116-92)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 자금 조달 또는 기타 촉진에 관여하는 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2차 제재를 적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및 안보리 규제를 위반하는 불법 사이버 및 암호 활동, 무기 조달 및 연료 무역에서 활동하는 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²⁴⁾

23)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으나, 구체적 행동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 2.0’이라는 비판도 받았음. 박형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1년…“외교적 접근 긍정적이나 구체적 행동 결여”」, *VOA*, 2022.4.29.

24) Mark E. Manyin, et. al., “U.S.-North Korea Relations”, *IN FOCUS* IF1024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4.24.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둘 것으로 천명하였고, 실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2023년 국방수권법(NDAA of 2023)』은 대통령이 북한의 “압박적인 정보환경”과 싸우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방송과 정보의 북한으로의 전파를 증가시키기 위해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북한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 단적인 예로, 2017년 이후 공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가 2023년 1월 지명되어, 7월 27일에 상원에서 인준되었고, 10월 13일에야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²⁶⁾

나. 비핵화 및 확장억제 정책

(1) 대북정책 공조와 비핵화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북한과의 양자 외교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였고, 트럼프 1.0과는 달리 북한과의 직접 협상도 시도하지 않은 대신,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과 확장억제의 보장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재확인하고,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공통된 접근법에 합의하였다.²⁷⁾ 2023년 4월 26

25) 위의 글.

26) U.S. Department of State, Julie Tuner,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2023.10.13.-Present(최종 검색일: 2024.7.4.), <<https://www.state.gov/biographies/julie-turner/>>.

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함으로써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비핵화 대신 군축 또는 핵동결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해왔다. 2024년 3월 정 박(Jung H. Park)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원칙론이 유연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 대북고위관리는 중간단계의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군축’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²⁸⁾

2024년 8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다시 부상하였다. 2016년의 공화당 정강정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명시되었었고,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북핵 위협 억제와 비핵화가 각각 당면목표와 장기목표로 제시되었던 점과 비교할 때 이러한 변화는 중간단계 조치나 군축론의 부상을 반영하는 것

27) 김도희, 「한미 대북정책의 내용과 쟁점: 위기의 고조와 기회의 모색」, 『이슈와 논점』 제196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7.4.

28)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는 가운데 북한까지 도발을 할 경우 안보여력이 분산되고, 대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에 관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여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있음. 박현주, 「두개의 전쟁’ 속 대선 치르는 바이든, ‘중간단계’ 연일 강조 의도는 … “北 오판 경계” 우려도」, 『중앙일보』, 2024.3.6.; 함지하, 「정 박 인터뷰 “북한 ‘무기 진전’ 우려…‘위험 감소’ 논의 가능”」, VOA, 2024.3.20.

으로 해석되었다. 심지어 10월 30일에 발표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삭제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이견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경제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점에서 비록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²⁹⁾

(2) 확장억제 정책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화한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³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³¹⁾ 이와 더불어 한미는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와 핵 및 전략기획 토의를 위한 메커니즘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2023년 7월 NCG 출범 이후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16일에는 한미 핵작전 수행을 위한 ‘NCG 가이드라인’에³²⁾ 합의하였고, 2024

29) 임수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이슈브리프』 제62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11.7.

30) 대한민국 대통령실, 「워싱턴선언」, 2023.4.26.

31) 박광연, 「한·미 정상 “북한과 외교 의지 재확인”...대화·협상과 거리 먼 현실」, 『경향신문』, 2023.4.27.

32) 가이드 라인은 ① 안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토콜, ② 위기 및 우발사태 시 핵협의 프로세스, ③ 핵 및 전략무기 운영계획, ④ 한미 간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년 2월에는 NCG가 지향하는 목표를 기술하고 있는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³³⁾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10일 개최된 제3차 고위급 회의에서 양국은 양국 간 핵 억제 작전을 위한 ‘공동지침 문서’검토를 완료하였고, 2024년 7월 1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승인하였다.³⁴⁾

한국 측은 공동지침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하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의 승인은 곧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³⁵⁾ 양국은 향후 공동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³⁶⁾ 그러나 2024년 12월 예정되었던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순연되었고, 적절한 시기

간 통합(U.S.-ROK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 ⑤ 전략대화, ⑥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포위(investment) 활동, ⑦ 한미 간 위험감소 연습을 포함하고 있음. White House, Joint Press Statement on Nucl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2023.12.16.

- 33) 국방부,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보도자료)」, 2024.2.14.
- 34) 또한, 양국 정상은 ① 보안 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②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③ 핵 및 전략기획, ④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⑤ 전략적 메시지, ⑥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⑦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음. 대통령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2024.7.11.
- 35)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현직 언론 브리핑. 이민영, 「한미정상, 핵억제·핵작전 공동성명...미 3대 전략 핵무기 상시 배치」, 『서울신문』, 2024.7.12.
- 36) 김한경, 「한미, 북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담은 ‘공동지침’ 작성 사실상 완료」, 『뉴스투데이』, 2024.6.10.

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³⁷⁾

3. 중국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소위 ‘한반도 3원칙’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와 같은 대한반도 기조는 지속되어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6자회담 등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다. 또한 북한 상황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쌍궤병행(双轨并进·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체제 전환)’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레드라인(红线)’으로 설정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기조 및 정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반도 정책 기조: 한반도 3원칙 견지와 핵심이익 수호

(1) 한반도 3원칙 견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한반도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지속되어 왔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체결한 『한중 공동성명』 제6조(한반도 조항)도 한국과 중국 “양측은

37) 이번 제4차 NCG 회의에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옥승욱,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및 도상연습 연기…비상계엄 여파인 듯」, 『뉴시스』, 2024.12.4.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6년 8월 24일 왕이 외교부장은 제8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일본 도쿄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을 때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3개 반대(三个反对)’와 ‘3개 견지(三个坚持)’를 제시한 바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모든 언행·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는 모든 계획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대화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 중국의 건설적 역할 강조

한반도 3원칙 기조의 유지 하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방식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2024년 6월 18일 『한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정세 발전의 맥락과 문제점이 분명한 만큼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립의 격화를 피하며,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중국은 항상 사안의 옳고 그름에 따라 입장을 결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년 9월 한중 외교장관 간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 측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³⁸⁾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7월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중국 측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원하지 않으며, 각 측이 함께 국면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³⁹⁾

그런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와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016년 2월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문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한반도 핵문제의 처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측이든 남측이든 자체 제작이든 도입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는 핵을 보유할 수 없으며, 둘째, 무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셋째, 중국의 정당한 국가 안보이익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양측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⁴⁰⁾ 비록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조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¹⁾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등이 이루어졌지만,⁴²⁾ 그 한계가 노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은 매우 제한

3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会见韩国外长赵兑烈」, 2024年9月29日.

3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会见韩国外长赵兑烈」, 2024年7月26日.

4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接受路透社专访谈叙利亚和半岛核问题」, 2016年2月13日.

41) International Crisis Group, “城门失火：中国为什么与朝鲜保持密切关系(Fire on the City Gate: Why China Keeps North Korea Clos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254, 2013.

42)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2375호까지 10여 년간 9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적’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다.⁴³⁾ 중국은 국제사회가 자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Don’t expect too much from Beijing)’는 점을 강조하면서,⁴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미국과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⁴⁵⁾ 중국의 북한 문제에 정통한 역사학자 선즈화(沈志華)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여 왔으며, 북중관계는 사실상 ‘냉정하고 거리를 둔 관계’이자 ‘서로 이웃하고는 있으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⁶⁾

일각에서는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북중이 긴밀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만, 사실 북한은 중국 측의 말을 잘 안 들으며, 타임테이블에 따라 핵실험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최상의 협상 대상국은 미국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 따른 차선책이며, 그런 맥락에서 북중관계의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⁴⁷⁾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컨대 2018년 ‘중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때, 중국은 “한반도가 조속히 전쟁상태를 종식하기를 지지한다(中方支持半岛早日结束战争状态)”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43) 「朝鮮又射導，堅決拒絕‘中國責任論’」, 『環球時報』, 2017年7月29日.

44)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Books, Monographs & Collaborative Studies, 773, 2004, p.vi.

45)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 2017年8月15日.

46) 선즈화(沈志華), 「중북 불신의 역사적 뿌리」, 『성균차이나브리프』vol.43, 성균중국연구소, 2017, pp. 24-39.

47) 김미경, 「미중 갈등 양면성 있어… 사안별 접근으로 국익 챙겨야」, 『디지털 타임스』, 2023년 6월 29일자.

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⁴⁸⁾ 2018년 8월 싱가포르 개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당시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시대 발전의 흐름에 완전히 부합한다(半岛终战宣言符合时代进步潮流)”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⁴⁹⁾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 내 학자들은 종전선언에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리둔치우(李敦球) 국제문제전문가 겸 취푸사범대학외국어학원 교수는 2018년 당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평가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의 역사적 조건이 성숙했다는 논평과 함께 중국이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법률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⁵⁰⁾

한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정전협정 체결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다(没有中国, 半岛终战宣言无效! 可随时推翻)”는 사실을 게재하면서, “한반도가 65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 중국이 빠진 북미 또는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빠지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⁵¹⁾ 향후에도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4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8年4月19日.

49) 「王毅: 发表半岛终战宣言符合时代进步潮流」, 『新华网』, 2018年8月2日; 「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记者会」, 2019年2月27日.

50) 李敦球, 「年内发布朝鲜半岛“终战宣言”值得期待」, 『中国青年报』, 2018年10月17日.

51) 「没有中国, 半岛终战宣言无效! 可随时推翻」, 『环球时报』, 2018年6月4日.

(3)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중국은 한반도 긴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시중 일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등 한반도 3원칙 기조를 이어오면서도, 중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데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당시 왕이 외교부장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집 앞에서 일어나는 소란(不允许在中国家门口生事)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중국의 레드라인(红线)“이라고 설정하며,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⁵²⁾

예컨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전략 안전과 환경안전’을 북한에 대해 억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마지노선(底线)’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마지노선’은 북한의 핵 활동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어떤 오염도 일으키지 않고, 대량의 난민이 북한에서 탈출하지 않으며, 압록강 반대편에 중국과 적대적인 정권이 세워지지 않고, 미군이 압록강 주변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으로 열거되고 있다. 이러한 마지노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북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는 것이다.⁵³⁾

한편 2024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경제무역·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우크라이나위기 및 한반도문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전략안보와 핵심이익⁵⁴⁾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⁵⁵⁾

52) 肖勇, 「“不允许在中国的家门口生事”看点在哪?」, 『中国网』, 2013년 4월 7일, 毕晓哲, 「“不允许在中国家门口生事”告诫一语双关」, 『国际在线』, 2013년 4월 7일, 「王毅: 朝鲜半岛就在中国家门口 绝不允许生战生乱」, 『中国新闻网』, 2014년 3월 8일.

53) 「中国该如何应对朝鲜新核试」, 『环球网』, 2017년 9월 3일.

54) 2011년 9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中国的和平发展)’ 백서를 통해, 중국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국가 핵심이익을

나. 대한민국 관련 주요 정책: ‘쌍궤병행’ 등 중국방안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6자회담 등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2013년 4월 1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John Forbes Kerry)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중국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으며, 즉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모든 관련 당사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개해 모든 당사국이 대화에 참여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2009년 3월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한 이후 수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답보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6년 3월 왕이 외교부장은 ‘쌍궤병행(双轨并进·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체제 전환)’과 ‘쌍중단(双暂停·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및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 중국방안(中国方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는 중요하지만, 결코 최종 목적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을 재개하여,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서 긴장이 악화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⁶⁾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국가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제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지속발전가능의 기본 보장 등을 말함.

5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在利马举行会晤」, 2024年11月17日.

56) 「王毅谈安理会最新涉朝决议:遏阻朝核导开发与尽快恢复和谈, 两者不可偏废」, 『新华网』, 2017年8月6日.

2017년 3월 중국 양회(전인대·정협) 기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중국방안을 제시하면서, ‘쌍중단’ 구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의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와 역내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며 관련 당사국 간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모든 당사자들의 우려를 고려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반도 문제를 지속적이고 철저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이 제시한 ‘쌍중단’ 제안과 ‘쌍궤병행’ 방식은 모든 당사자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처리하고 한반도 문제의 현실을 반영하며 현 문제의 초점을 포착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노력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국 내 주요 지도부 발언이나 각종 공식 문서에서 ‘쌍중단’ 발언이 사라지고, ‘쌍궤병행’과 함께 ‘단계적-동시적(分阶段, 同步走) 접근’ 원칙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미묘한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해법이 현 한반도 정세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3월 7일 14차 전인대 2차 회의 당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쌍궤병행’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합리적인 북한의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议)’의 틀에서도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

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기제 구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우려에 대한 균형 있는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나 한국의 우려를 중심으로 한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모두 균형적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관련 모든 당사국들이 모순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제재와 압박에 집착하는 대신 냉정과 자제를 발휘하고 상황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일본

가. 대한반도 정책기조

(1) 일본의 대한국 정책기조

역사적·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일본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한일관계는 동북아시아 국제시스템과 양국의 파워관계, 양국의 국내 체제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들 요소에 의해 1965년 이후 한일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고 있다.⁵⁷⁾

제1기는 1965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한일관계는 냉전체제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정치 안보, 경제적 결속을 강화시켜 나갔다.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공산 진영과 대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

57) 이원덕·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 역사공간, 2015, pp. 36-50.

는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추구하였다.

제2기는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의 시기이다. 이 기간 한일관계는 냉전 질서의 해체로 인해 반공에 기반한 결속력이 급속도로 이완되었다.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에 분출됨으로써, 양국 간 역사 마찰이 격화되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양국 관계라는 인식도 강화되었으며,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제3기는 201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였고, 중일 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었다. 일본의 상대적 국제 지위 하락에 따라 관대한 국제 인식이 사라지고, 경제 침체에 따른 사회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2012년 아베 재집권 이후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일관계에서도 힘의 수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199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6,450달러였으나, 2023년 36,194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1990년 19,699달러였으나, 2023년 35,793달러로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역전하였다.⁵⁸⁾ 기타 방위비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양국 관계가 대칭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호 경쟁의식이 격화되었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한일 간 쟁점에 대해 상대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이 역사문제였다.⁵⁹⁾

2010년 이후 한일 양국 관계는 역사문제로 인하여 부침을 거듭하였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천황의 사죄 요구 등을 계기로 급히 냉각

58) 「韓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日 추월」, 『한국경제신문』, 2024.6.5.

59)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의 대칭성과 상호협력 방안」, 『JPI PeaceNet』2023-03, 제주 평화연구원, 2018.3.8.

되었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현재의 외교·정치문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정체되었던 고위급 대화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나,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8년 강제징용피해자문제 대법원판결 이후 급속히 냉각되었던 한일관계는 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정부 입장 발표(23.3.6) 이후 12년 만에 양국 정상 상호방문 등을 시작으로 회복 중이다.

2024년 일본 「외교청서」(外交青書)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⁶⁰⁾ 또한, 최근 인도·태평양의 엄격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현재 필요하며 2023년 한일관계의 개선이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일본의 대북한 정책기조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은 2002년 9월 발표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⁶¹⁾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합의한 것이다. 동 선언은 ①

60) 外務省, 「外交青書」, 2024(최종검색일: 2024.12.3.),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4/pdf/pdfs/1_2_2.pdf>.

61) 外務省, 「外交青書」, 2024(최종검색일: 2024.12.3.),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4/pdf/pdfs/1_2_2.pdf>.

2002년 10월 국교정상화교섭 재개, ②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 표명, ③ 국교정상화 후 무상 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 지원,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공여 실시, ④ 북한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⑤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 문제 해결 필요성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한편, 2022년 12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지침으로서 최상위 문건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이 개정되었다. 여기서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발전이 일본 안보에 심각하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⁶²⁾

2024년 「외교청서」는 북한이 2023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위성 발사를 반복한 데 대해 일본의 안전보장상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에 의한 핵·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나. 일본의 대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1) 일본의 대한국 주요 정책

(가)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재산·

62)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최종검색일: 2024.12.3.),
<<https://www.cas.go.jp/jp/siryou/221216anzenhoshou.html>>.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제1조)하고,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이것이 현재까지의 한일관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합의 하에 약속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 국내 위안부와 관련한 소송 등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³⁾

강제동원피해자문제와 관련하여 외무성은 2018년 10월 30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외무대신 담화형식으로 정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사안 역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관련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건의 일본의 대법원판결은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즉각 회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원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여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단호한 대응을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⁶⁴⁾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63) 外務省外務大臣談話, 「元慰安婦等による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おける訴訟に係る判決確定について」, 2021.1.23

64) 外務省, 「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 平成30年10月30日; 「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平成30年11月29日.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조치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한일·한미일 협력

2022년 12월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동맹국·동지국⁶⁵⁾ 등과 연계하여 국제관계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일본 안전보장상의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미일, 미일호 등의 틀을 활용하고, 호주, 인도, 한국, 유럽, 아세안 등과의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2018년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양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호주, 인도, 아세안, 한국 순으로 명기한 바 있으나,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호주, 인도, 한국, 유럽, 아세안으로 한국의 순위를 앞당겨 언급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⁶⁶⁾

한편, 한일 양국 간 협력에 앞서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틀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국제회의 계기 회담이 아닌 단독회담의 형태로 처음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후 ‘캠프

65) ‘동지국’은 외교과제에 있어서 목적을 함께 하는 국가를 의미함. 어떤 국가를 동지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하야시(林芳正) 외무대신은 일본과 목적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함. 한편, 유사개념으로 동맹국이 있는데, 동맹국은 ‘공통의 목적’ 뿐만 아니라, ‘행동도 같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第211回国会参議院予算委員会第14号」 2023年3月24日.

66) 박명희,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NARS 입법정책보고서』 제1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p.8.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⁶⁷⁾이 발표되었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전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협력의 틀을 인도·태평양으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고, 안보뿐 아니라 경제, 개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⁷⁾

첫째,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공조하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 즉, 한미일 협력은 한미일 3국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3국 간 중층적 소통 메커니즘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개최하고, 3국 재무장관회의, 상무산업장관 간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각국의 접근을 연계하기 위해 국장·차관보급 인도·태평양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셋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실무그룹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넷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다 영역에 걸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놈펜 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함을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 공급망 교란을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하고,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우주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67) 박명희,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일본 내 평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제214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p.3.

일본 정부는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 후 이번 회의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⁶⁸⁾ 2024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1주년(8.18) 기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 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⁶⁹⁾ 아울러, 2024년 11월 20일 한국 외교부에 한미일 사무국이 설치되었다.⁷⁰⁾

(2) 일본의 대북한 주요 정책

(가) 납치피해자 문제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 제12차 국교정상화 본회담이 개최된 이후 북·일 관계의 모든 의제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일원화되었으며, 제13차 국교정상화 본회담은 열리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7명이다.⁷¹⁾ 한편, 북한은 납치 피해자가 총 13명이며 그 중에 생존자

68) 外務省, “岸田総理大臣の日米韓首脳会合出席”(최종검색일: 2024.12.3.), <https://www.mofa.go.jp/mofaj/a_o/na2/page1_001779.html>.

69) 대통령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8.18)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2024.8.18.(최종검색일: 2024.12.5.),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LMWjwZk4>>.

70) 한미일 사무국은 순환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사무국장을 2년씩 맡기로 합의되었으며, 초대 사무국장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담당하게 되었음.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출범회의(11.20.) 개최」, 2024.11.20.(최종검색일: 2024.11.21.),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651>.

71) 2002년 9월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은 일본이 제기한 13명의 납치피해자 중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북한 입경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음. 政府 拉致問題対策本部,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최종검색일: 2024.12.5.), <<https://www.rachi.go.jp/>>.

는 5명이고 나머지 8명은 사망했으며, 이것으로 진상이 규명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이 출범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분리해서 납치피해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2021년 10월 8일 제205회 중의원 본회의 소신표명 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 2024년 5월 11일 납치 문제 관련 국민 대집회 등에서 수차례 표명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와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납치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간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은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북러 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대북접근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²⁾

(나) 대북제재

2024년 『방위백서(防衛白書)』는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에 포함하는 탄도미사일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이미 실현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약 30발(전체 50~70발분의 핵탄두를 생산할 만큼의 핵분열성 물질을 저장)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⁷³⁾

일본은 북한에 의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UN 결의안에 의한 조치 및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다. UN 결의안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에 근거하여 무기 수출입금

72) 윤석정, 「북·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정상회담을 둘러싼 움직임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73) 防衛省, 『防衛白書(令和6年)』, 2024(최종검색일: 2024.11.30), <<https://www.mod.go.jp/j/press/wp/wp2023/html/n130401000.html>>.

지, 자산동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독자적인 제재로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인도적 목적 제외), 북한과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금지 등도 실시하고 있다.

[표 1]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

| 구분 | | 주요 내용 |
|----------|----------|--|
| 인적 왕래 | UN 제재 | - 제재대상자 및 관련자의 입국·경유 금지, 추방(2016) - 해외 북한노동자의 고용금지(2017) |
| | 독자 제재 | -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금지(2006) - 일본인 북한 도항 자제 요청(2006) - 대북무역·금융조치 위반 재일외국인 입국, 재입국 금지(2009) - 조총련 및 북한 방문 핵·미사일 기술자 일본 재입국 금지(2016) |
| 금융 | UN 제재 | - 제재 대상자에 대한 경제지원 동결, 송금 및 지원금지(2006) - 북한에 대한 대량현금 등 금융, 자산 제공 및 정산금지(2013) - 북한은행의 타국 내 지점 개설 금지(2016) |
| | 독자 제재 | - 일본 금융기관과 북한 무역결제 은행과의 거래금지(2013) - 인도적 목적(10만엔 이하)의 대북송금 원칙적 금지(2016) -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현금 휴대반출(10만엔 이상) 신고(2016) |
| 교역 | UN 제재 | -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 금지(2006) - 사치품수출입금지(2006) - 북한산 광물 수출금지(2016), 조업권·식료품수출금지(2017) - 대북 원유수출제한(2016) |
| | 독자 제재 | - 북한의 모든 품목 수출입금지(2006, 2009) - 북한을 원산지 혹은 선적지로 하는 모든 화물의 수입 금지(2010) - 북한과 제3국과의 이동에 동반된 화물의 매매, 임차 혹은 대여에 관한 거래(중개무역거래) 금지(2011) |
| 운항 | UN 제재 | - 금지행위 연루 선박의 나포·검색·동결 의무화(2013) - 제재위 지정 제재 선박에 대한 회원국 입항 금지(2016) |
| | 독자 제재 | - 일본 북한 간 항공전세기 운항불허(2006) - 만경봉 92호 입항금지(2006) - 북한선박 입항금지(2006) -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일본 입항금지(2016) |

출처: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 經濟産業省 자료 필자 재구성⁷⁴⁾

5. 러시아

가. 대북정책

(1) 러우전쟁과 북러 협력 강화 배경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 2024년 초까지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2024년 중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과 군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북한과의 외교안보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러우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군비 부족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8,800대의 장갑 전투 차량을 잃었는데, 2023년에만 3천대의 손실이 발생한 탓에⁷⁵⁾ 소련 당시 사용되던 T-54/55과 T-62와 같은 노후 전차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⁷⁶⁾ 무기 수요가 급증한 반면, 방산업계의 숙련 노동자와 최첨단 기술은 증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리 보리소프(Yuri Borisov) 러시아 연방우주청(Roscosmos) 청장은 근시일 내에 방산업계에 40만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⁷⁷⁾

74)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최종검색일: 2024.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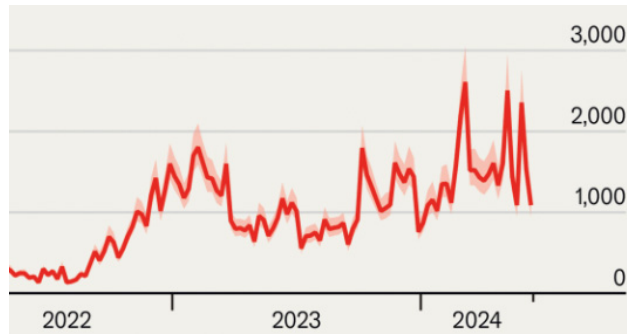
<http://www.cistec.or.jp/export/keizaiseisai/saikin_keizaiseisai/index.html#2_nihon>.

75) 러시아는 상당 규모의 군비 손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군비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일례로, 2023년 기준, 러시아는 1,180대 ~ 1,280대의 주력전차(Main battle tanks), 2,470대의 병력 수송 장갑차(Armoured personnel carriers)와 보병 전투차(Infantry fighting vehicles)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Johann Michel and Michael Gjerstad, “Equipment losses in Russia’s war on Ukraine mount”, IISS, 2024.2.12.

76) Francesca Ebel, “Russia is shipping very old tanks west, signaling shortage in Ukraine”, The Washington Post, 2023.3.23.; Tetiana Lozovenko, “Russia loses over 2,000 tanks in war against Ukraine - Oryx monitoring group”, Ukrainska Pravda, 2023.5.29.

병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정확한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2024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사망자 11만5천여 명과 부상자 50여만 명을 합해 총 러시아군 사상자가 6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⁷⁸⁾ 러시아는 매달 2만5천 명에서 3만 명의 병사를 신규 소집하고 있지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중반부터 한주에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병력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⁷⁹⁾

[그림 3] 1주당 러시아군 사망자 수 추이



자료: “Russian soldiers killed in Ukraine, weekly estimates”, *The Economist*, 2024.7.5.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도 러시아의 경제 및 외교안보 상황 악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4년 대러 제재는 전면적인 무역 및 금융거래 차단 대신 에너지, 군수산업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제재였지만, 2022년 제재는 러시아 경

77) Maxim Starchak, “Russia’s maxed-out arms makers face labor, tech shortages”, *Defense News*, 2024.2.22.

78) Eric Schmitt, “September Was Deadly Month for Russian Troops in Ukraine, U.S. Says”, *The New York Times*, 2024.10.10.

79) “Russian soldiers killed in Ukraine, weekly estimates”, *The Economist*, 2024.7.5.; Emily Crane, “Russia loses 2,030 troops in 24 hours — highest death toll in a day, Ukraine says”, *New York Post*, 2024.11.29.

제에 실질적 손실을 야기하기 위한 징벌성 제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러 제재의 경우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러시아 정부의 산업별 발전 전략 수정 그리고 중국 및 인도, 이란,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제재 효과가 제한되었다.⁸⁰⁾ 그 결과 러시아 GDP 성장률은 2022년 2사분기부터 2023년 1사분기까지 각각 -4.5%, -3.5%, -2.7%, -1.6%를 기록했으나 2023년 2사분기에는 4.9%, 2024년 1사분기와 3사분기에는 각각 5.4%, 3.1%에 달할 정도로 개선되었다.⁸¹⁾

(2) 북러 외교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러시아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군비와 병력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면에서 구소련 무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적절한 협력 파트너였다. 2023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협력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들어 북러 관계는 더욱 밀착되었다. 2024년 1월, 최선희 외무상은 2022년 임명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외교 관계 강화를 논의하는 등, 고위급 인사 교류가 실행되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국가가 전시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80) 정민현, 강부근, 민지영, 김원기,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KIEP, 2024.8.1.

81) Trading Economics, Russia GDP Annual Growth Rate(검색일: 2024.12.5.), <<https://tradingeconomics.com/russia/gdp-growth-annual>>.

한 국가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NATO의 집단안보체제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안보 동맹이라 할 수 있다.

북러 간 동반자관계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공식 폐기되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부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 명시되어 있던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동반자관계 조약으로 다시 법적 효력을 얻게 된 것이다.⁸²⁾

북러 안보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러우전쟁에 관하여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무기와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22mm와 152mm 포탄 등 80여만 발,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⁸³⁾ 군 병력도 1차로 1,50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되는 등 12월 초 기준 1만 명 이상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24년 10월, UN 주재 북한 대표부는 러시아 파병설을 부인했으나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였다.⁸⁴⁾

82) 이래현, 리차드 김, 「북러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BBC*, 2024.6.20.

83) 국가정보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보도자료)」, 2024.10.18.

84) 나세웅, 「북한 유엔대표, 러시아 파병설에 "근거없는 소문" 부인」, 『MBC』, 2024.10.22.; “Russia Refuses To Say If N.Korean Troops Fighting Against Ukraine”, *Barron's*, 2024.11.8.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한 배경으로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러시아의 군비 부족을 들 수 있다. 우선, 북한은 북러 협력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타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GDP 경제성장률이 각각 -4.5%, -0.1%, -0.2%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다만, 2023년 들어 북한 GDP는 32조3천201억 원으로 전년(31조3천618억원) 대비 3.1% 성장했는데, 이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팬데믹 관련 통제가 완화되어 대중 대외 교역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⁵⁾

더 나아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도 강화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24년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파병의 대가로 핵 기술 이전을 요청하였으며, 러시아가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을 인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⁸⁶⁾

이에 대하여 서방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쟁 당사국 외 제3국이 직접 참전하는 것으로 러우 전쟁의 확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12월 4일, 마르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외교장관 회의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병력과 무기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이러한 진전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⁷⁾ 이와 같은 북러 안보 협력은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

85) 한국무역협회, 「작년 북한 경제성장률 3.1%…코로나19 완화 덕 4년 만에 성장」, 2024.7.26.

86) Robert Peters, “The Potential for Russia to Supercharg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e Heritage Foundation, 2024.10.22.; Natasha Bertrand, “North Korea likely to ask for nuclear technology from Russia in exchange for troops, South Korea says”, CNN, 2024.10.30.

87) 조상진,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지원…미한 안보 위협”」, VOA, 2024.12.4.

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⁸⁸⁾

서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동맹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체결된 협정 이행에 외교 당국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하는 등 북러 안보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대(對) 한국 정책

(1) 한러 간 외교안보 관계

러우전쟁 전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990년 9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2년 11월 한-러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 2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경제 및 정치외교 협력을 도모하였다. 이후 양국 협력이 가속화되어 2013년 푸틴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에너지, 북극, 우주 및 첨단 기술, 교통과 물류 등 15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에는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 발표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농업, 북극항로 등 9개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일, 러우전쟁은 한러관계를 현격히 악화시켰다.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2022년 3월 러시아가 한국을 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하여 러시아가 우리나라 기업 및 개인들과 거래를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제하였다. 2023년 7월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군사적, 인도주의적, 경제재건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러 안보

88) Edward Howell, “North Korea and Russia’s dangerous partnership”, Chatham House, 2024.12.4.

협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었다.⁸⁹⁾

(2) 경제·사회적 관계

러우전쟁 이전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관계도 확대되었다. 2021년, 양국 교역 규모는 273억 3,62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 중 2.17%를 차지하는 12위 수출 시장으로 성장할 정도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에는 한러 간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도 크게 위축되었다. [표 2]는 2019년부터 2024년 1사분기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동향을 보여준다. 2019년 한러 교역액은 223억 달러(수출액 77.7억 달러, 수입액 145.6억 달러)이었으나, 2024년에는 31.6억 달러(수출액 14.7억 달러, 수입액 16.9억 달러)로 5년 사이에 191.4억 달러, 즉 86.4%나 감소하였다. 특히,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교역량이 급감하여 2022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6%, 2023년에는 -3.1%, 2024년에는 -11.7%, 수입액은 같은 기간 각각 -14.6%, -40.0%, -34.4% 줄었다.

89) Ellen Kim, “Seoul-Moscow Relations on a Dangerous Slippery Slope”, CSIS, 2024.2.22.

[표 2]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

|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수출 | 7,774,133 (6.2) | 6,899,968 (-11.2) | 9,979,539 (44.6) | 6,328,173 (-36.6) | 6,133,435 (-3.1) | 1,471,660 (-11.7) |
| 수입 | 14,566,507 (-16.8) | 10,630,194 (-27.0) | 17,356,692 (63.3) | 14,817,362 (-14.6) | 8,891,986 (-40.0) | 1,690,152 (-34.4) |
| 무역수지 | -6,792,374 | -3,730,226 | -7,377,153 | -8,489,189 | -2,758,551 | -218,492 |

주: 2024년은 1사분기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의 수출입(검색일: 2024.12.8.),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2024년 1사분기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하락세가 컸던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 (-56.7%), 자동차부품(-45.8%), 승용차(-28.6%) 등이며, 대표적인 수입 하락 품목은 유연탄(-57.3%), 천연가스(-9.0%)이었다. 한러 교역액의 급감은 대러 제재의 영향이 크다. 2023년의 경우, 4월부터 5만 달러 이상의 승용차를 대러 수출통제 물품에 포함시켰으며, 12월에는 수출통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 초과로 변경하면서 자동차 관련 수출입 금액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12위 수출 시장이었던 러시아는 2022년과 2023년에는 21위, 2024년 1사분기 때에는 22위로 하락하였다. 한러 교역 관계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 외교안보 현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⁹⁰⁾

90) 강부균, 「최근 한-러시아 교역 동향과 시사점」, KIEP, 2024.6.7.

Ⅲ.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 정세의 특징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반도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 세력 결집과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미중경쟁의 심화와 러우전쟁 발발이라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추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신냉전 체제’ 선언 및 북중러 협력 강화의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1. 진영화와 신냉전

가. 한반도의 특수성과 진영화 양상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1945년 냉전의 산물로 분단되었다. 이후 한국전쟁(1950년~1953년)을 계기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냉전적 구조가 유지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3년 3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6자회담(남·북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미중 경쟁의 심화로 국제사회의 협력은

점차 악화되었고, 그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결국 실질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는 사실상 주요국들의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과 그들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와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 of China and Russia)로 규정하였다.⁹¹⁾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탈냉전 국제질서의 혜택을 통해 성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독재 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어기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immediate threat)”을 가하는 국가로 묘사된 반면,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및 기술력을 점차 갖추어나가는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로 평가하고 있다.⁹²⁾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최우선 외교정책 과제로 설정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강대국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결속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북중러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작용을 불러왔으며, 특히, 러우전쟁 이후 북러 및 중러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반도에서의 진영화가 한층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 주요국들의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

9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12, p.25.

92)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10., pp.8-9.

르면, 학계와 전문가 그룹 내에서 이러한 진영화 추세를 신냉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현재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진영화 양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로 나뉜 진영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⁹³⁾

나. 북한의 ‘신냉전 체제’ 선언

2018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을 합의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 딜’(no deal)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⁹⁴⁾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 봉쇄를 선언하면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나가야 한다며 대미정책을 재편할 것과 함께 공개적으로 미국을 ‘주적’으로 지칭했다.⁹⁵⁾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김정은의 위협인식은 점차 국제질서에 대한 ‘블록’과 ‘구도’의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 정부가 출범한 뒤, 같은 달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93) 이승현·김도희·김예경·심성은·박명희·이승열, 위의 글.

9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95) 위의 기사.

은 더욱 확고히 재확인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2022년 6월 8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까지 겨냥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에 대해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⁹⁶⁾ 김정은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선언하였고, “자위권은 국권수호의 문제”라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것을 적극 독려했다.⁹⁷⁾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인식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였다. 먼저 김정은은 개막연설에서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방향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⁹⁸⁾ 또한 김정은은 2023년 1월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다.⁹⁹⁾ 김정은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과의 3각 공조실현”을 추진하여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⁰⁰⁾ 그 결과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최대의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냉전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인식은 2023년 4월 대북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한미 ‘위성턴선언’과 2023년 8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공식화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김정은은 2023년 9월

9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2.6.11.

97) 위의 기사.

9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로동신문』, 2022.12.27.

9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3.1.1.

100) 위의 기사.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러 군사협력을 본격화하였으며, 전통적인 북·중·러 삼각 동맹을 복원하려는 ‘균형’ 조치를 적극 시도하였다.

“국가는 왜 동맹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위협’(threats)에서 찾았다.¹⁰¹⁾ 월트는 위협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행위를 ‘동맹’이라고 주장하였고, 위협에 대한 반대의 동맹을 ‘균형(balance)’으로, 부상하는 국가에 영합하는 동맹을 ‘편승(bandwagon)’으로 정의하였다.¹⁰²⁾ 월트는 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국가들이 위협을 받게 되면 ‘편승’보다는 대체로 ‘균형’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¹⁰³⁾ 즉,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 확보를 위해 내적으로는 군비증강을 선택하고, 외적으로는 동맹을 확대하면서 대내외적인 ‘균형화(balancing)’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일의 ‘남방삼각체제’에 대응하여 북소중의 ‘북방삼각체제’를 구축한 것이나,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제1차 북핵 위기와 2000년대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제2차 북핵 위기를 촉발한 것은 월트의 주장대로 북한이 ‘위협’에 대한 반대의 동맹, 즉 ‘균형’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01)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5.

102) Stepha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Spring, 1985), p.4

103)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p.5.

2. 한미일 대 북중러 협력

가. 한미일 협력¹⁰⁴⁾

(1) 한미일 협력의 의의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첫 3국 정상회담 이후, 주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3국 정상회담들과 달리,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단독으로 개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한미, 미일, 한일 등 양자 관계의 연계를 넘어, 3국이 직접적인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의 논의 결과를 향후 3국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포함한 기본지침 격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명시한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그리고 위협 발생 시 정책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3국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세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전통적인 위협 대처 외에도 경제안보, 신기술 보호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⁰⁵⁾ 특히, 군사안보, 경제안보, 사이버,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의제

104) 이 장은 「한미일 삼국협력 포럼(2024.3.21.) 발표문」을 발전시켜 작성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전체 내용은 다음의 저서에 제9장에 포함되어 있음. 김도희,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시대의 전망과 과제」, 황재호 편,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동인과 변인 그리고 미래』(서울: 이담북스), 2024.

105) Lisa Curtis, Evan Wright and Hannah Kelley, “Forging a New Era of U.S.-Japan-South

를 포함하면서, 3국 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의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즉, 한미일 3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1%를 차지하고, 반도체 장비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3국 협의체가 글로벌 차원에서 사실상 새로운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¹⁰⁶⁾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협력 확대가 7번째 핵심 노력선(core lines of effort)으로 설정된 만큼, 미국 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체 구축이 큰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한일관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¹⁰⁷⁾ 국내 일각에서는 3국 협력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3국 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용성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한미일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의 3국 협력에 대한 합의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성과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합의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¹⁰⁸⁾

(2) 한미일 3국 협력의 영향요인과 전망

한미일 협력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가장 큰 이유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지목된다. 해방 이후 20여 년간 한일 양국은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후에도 일부 협력을 추진했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 영해 문제, 조업권,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The Key to a Stable, Secure Indo-Pacifi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2024.3.21.

106) 김현욱, 「[기고] ‘새 시대’를 맞은 한미일 협력」, 『동아일보』, 2023.8.21.

107) 박명희,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일본 내 평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제214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10.5.

108) Atlantic Council, “Experts react: The US-Japan-South Korea summit was ‘historic.’ But what did it accomplish?”, 2023.8.18.

위안부, 강제노동 피해자 등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을 이어왔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를 한미일 삼국 관계의 약한 고리로 만들었고, 미국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개입해왔다. 미국의 중재 노력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물밑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와 별도로 회동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중재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일 간 역사문제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¹⁰⁹⁾

따라서 한일 간 역사문제와 더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맹 관리 역량과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냉전 및 탈냉전기와 달리, 미중 경쟁과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다중 위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력은 과거처럼 절대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두 나라 모두 독자적으로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셋째, 동맹의 협력 범위가 군사·안보 영역을 넘어 경제 안보, 신항기술, 사이버, 우주, 보건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방식에서 벗어나 격자형(lattice work) 소다자 동맹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국력은 쇠퇴한 반면 한국과 일본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동맹 간 협력 범위는 더욱 포괄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

109) 손열,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2018, pp. 157-159; 조양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 미국의 동맹관리의 시각에서」, 『정책연구시리즈』 202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p.15.

통적인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포괄적 협력으로 대표되는 격자형 소다자 동맹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미국의 전략에는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맹 간 국익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나. 북중러 협력

(1)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를 통한 긴장 고조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군사협력이 본격화되었다. 먼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부족한 탄약과 포탄을 제공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항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탄약고까지 전쟁 물자를 보낸 것이다.¹¹⁰⁾

이에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해 다양한 군수 관련 첨단 기술을 제공하였다. 지난 2024년 5월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러시아 관계: 현재 발전 현황’(North Korea-Russia Relations: Current Development) 보고서에서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최근에는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¹¹¹⁾ 특히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는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 지원과 함

110) 함지아, 「미 국무부, 러시아의 무기 거래 부인 일출, 북한 무기 거래 시도 폭로할 것」, *VOA*, 2023.10.28.

111) Mary Nikitin, Mark Manyin, and Andrew Bowen, “North Korea-Russia Relations: Current Development,” *INSIGHT* IN1235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5.6.

계 전투기 현대화와 지대공미사일, 무장전투차량, 탄도미사일 생산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¹¹²⁾

북러 군사협력은 지난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더욱 고도화되었다. 특히 “쌍방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중략)...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북러 조약 제4조는 1961년 체결되어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상의 ‘자동 군사개입조항’이 복원되었음을 의미했다.¹¹³⁾

양국 간 군사동맹의 복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듯 각각 2024년 11월 9일과 11월 11일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파병이 북러 동맹조약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북러 군사 협력을 배경으로 대남 및 대미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북러 조약 체결 직후부터 다탄두 미사일 실험(6.26)과 4.5톤 초대형 탄두 미사일 실험(7.1)을 실시하였고, 10월 31일 미국 차기 정부를 겨냥하여 ‘화성-19형’ ICBM 시험 발사를 시도하여 북러 군사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군사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 중러 협력과 대북지지

트럼프 1.0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적인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였고,¹¹⁴⁾ 이

112) 위의 보고서.

1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 2020.6.20.

러한 흐름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러우전쟁 초기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던 중국이, 2023년 이후 중러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공고해졌다.

2023년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이후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신시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새로운 시대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발전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공동성명에서는 현재의 국제질서 구조가 중대한 조정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극 체제가 형성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려는 지역 강국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만연해 국제법의 인정된 원칙과 규범을 '규칙에 근거한 질서'로 대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¹¹⁵⁾

2024년 5월 16일 중러 정상회담이후 발표된 「수교 75주년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중러 관계가 냉전 시대의 동맹을 초월해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또한, 미국이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 모델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군사와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대만, 우크라이나, 북한, 팔레스타인 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은 반미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¹¹⁶⁾

114) 홍현익, 「트럼프 시대 미·중·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경기: 세종연구소, 2020.10.30.

115) 조성하, 「[중러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중 9600자, 영 4만 3000자로 “반미연대”(종합)」, 『뉴시스』, 2023.3.22.

116) 박민희, 「시진핑식 푸틴 활용법, ‘친러중립’의 복합방정식」, 『한겨레』, 2024.7.2.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러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그 동맹국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동과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형세의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치를 취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¹¹⁷⁾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간 반미연대를 위한 협력에는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우전쟁 초기 중국이 중재자적 입장을 취한 점이나, 석유 및 자원 구매를 제외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좀 더 의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환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를 관리하거나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 역내 안보환경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옛 소련 영토에 대한 영향력 회복이나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러 협력의 한계와 함께, 양국 관계가 복잡적이고 비대칭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¹¹⁸⁾

117) 이세진, 「시진핑·푸틴, 北 두둔 한목소리...“美-동맹국, 대북위협 반대”」, 『채널A』, 2024.5.17.

118) 정재홍·이동민,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세종정책브리프』2023-17, 세종연구소, 2023.12.11.

(3) 북중관계와 북중러 3국 협력의 가능성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북러 동맹관계의 복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징후가 다수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중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사건은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사례로 해석되었다. 이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¹¹⁹⁾

러우전쟁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북중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자 하였고, 2023년 7월 러시아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하였다.¹²⁰⁾ 북한 김정은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군사블록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분으로 냉전 시기와 같은 북중러 삼각 공조를 추진함으로써 중러 양국 사이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북중러 삼각 공조보다는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¹²¹⁾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구체적인 이유로, 북중러 협력은 중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한미일 협력과

119) 안준호, 「전문가들 “중국,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대북정책엔 변화 없을 것”」, *VOA*, 2024.7.31.

120) 최인영, 「러 국방 "북한과 연합훈련 개최 논의…이웃인데 왜 안되겠나"」, 『연합뉴스』, 2023.9.5.

121) 노민호, 「파병으로 선 넘은 북러 군사 밀착...중은 ‘북중러 거리두기’ 이어갈 듯」, 『뉴스1』, 2024.10.20.

유사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¹²²⁾ 이러한 협력이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¹²³⁾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국은 북중러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¹²⁴⁾

결과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는 기존의 양자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중러 3각 공조체제로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북러조약을 통해 중국을 삼자협력을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김정은의 전략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북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¹²⁵⁾ 반면,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북중러 3각 연대가 본격적으로 결성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¹²⁶⁾

122) Global Times, “China, Russia won't mind US attitude to enhance strategic consultations”, *Global Times*, 2023.9.18.

123) David Pierson and Choe Sang-Hun, “Russia and North Korea’s Defense Pact Is a New Headache for China”, *The New York Times*, 2024.6.20.

124) 이동규·김지연,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이슈브리프』 2023-29, 아산정책연구원, 2023.12.20.

125) 이승열, 「북러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이슈와 논점』 제225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p.4.

126) Abhishek Sharma, The Growing China-North Korea-Russia Axis and South Korea’s Response, *Diplomat*, 2023.10.6.

IV. 트럼프 2.0과 한반도 정세 전망

1. 트럼프 2.0과 남북한 관계 전망

2025년 1월 20일, 미국에서는 트럼프 2.0이 출범한다.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unpredictable)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현 시점에서 트럼프 2.0의 대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트럼프 1.0 당시의 정책과 「2024 공화당 정강정책(Republican Platform)」¹²⁷⁾ 그리고 트럼프의 유세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한미동맹에는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북미관계에서는 정상외교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트럼프 2.0과 한미동맹의 의제¹²⁸⁾

이번 공화당 정강정책은 트럼프 진영의 대선 슬로건인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제목으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1.0의 정책과 공약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¹²⁹⁾ 공화당 정강정책 제10장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Return to Peace through Strength)’에서는 한국이나 북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나,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127) GOP,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2024. 7.8.

128)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을 다음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할 것. 김도희, 「트럼프 2.0 ②: 방위비 분담금과 퍼펙트 스톱」, 『이슈와 논점』 제231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12.20.

129) Maggie Haberman, Shane Goldmacher and Jonathan Swan, “Following Trump’s Lead, Republicans Adopt Platform That Softens Stance on Abortion”, *New York Times*, 2024.7.8.

(Heritage Foundation)이 발간한 「프로젝트 2025」의 “리더십을 위한 명령(Mandate for Leadership)”에서 트럼프 1.0 말기 국방장관 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C. 밀러(Christopher C. Miller)는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¹³⁰⁾ 또한, 트럼프 1.0 시기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의 공정한(fair) 분담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트럼프 2.0에서 한미동맹의 가장 큰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³¹⁾ 또한,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면서도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더는 이용당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주장한 바 있다.¹³²⁾ 이에 대한 우려로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발효했으나,¹³³⁾ 트럼프 2.0에서 이 협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¹³⁴⁾

130) Heritage.org., Project 2025 Publishes Comprehensive Policy Guide,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3.4.21.

131) C-Span, Campaign 2024 Former President Trump Interview with the Economic Club of Chicago(Full text), 2024.10.15.

132) 이에 대해 CNN은 위 트럼프의 주장이 전부 거짓이라고 보도하였음. Daniel Dale, Fact check: Trump makes at least 19 false claims in one-hour Fox town hall with women, CNN, 2024.10.16.

133) 제12차 SMA의 첫해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고,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책정하기로 했음.

134)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상원)의 자문과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 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으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체결·종료할 수 있음. Stephen P. Mulligan, International Agreements (Part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인한 한미 갈등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확장억제 체제 등 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 내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동맹 외부의 국가들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크다.

나.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김정은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¹³⁵⁾ 따라서 트럼프는 재집권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해 김정은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노딜’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트럼프와의 3차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대처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하노이 때보다 더 적게 양보하고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때와 달리 김정은은 북러 군사 협력을 배경으로 다량의 핵물질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종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국가로 인정받는 동시에 핵군축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즉흥적인 성격으로 인해 ‘빅딜’보다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I): Overview and Agreement-Making Process, *Legal Sidebar* LSB1104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9.29., p.2.

135) 문병기·신진우, 「트럼프 정권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동아일보』, 2024.11.28.

과 축소에 비중을 둔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과연 미국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 2.0 초반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늢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

북러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이례적으로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네 차례(제8기 제4차부터 제7차까지)나 연속 개최하여 대남 ‘전쟁 준비태세’를 국정 의 전면에 내세웠다.¹³⁶⁾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의 전쟁 수행 목표가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력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¹³⁷⁾

이를 위해 김정은은 군수공장의 무기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5월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에서 국방공업이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군수품 생산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지시했다.¹³⁸⁾ 이런 가운데, 북러 조약을 통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김정은의 대남 ‘전쟁준비태세’ 행보에 더욱 자신감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2024년 5월 22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표단(ICUV)의 일원인 안드리 오르디노비치(A. Ordynovych)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자국 무기의 성능을 개발하는

136) 「전쟁준비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데 대한 문제」, 『조선중앙통신』, 2023.8.10.

137) 「80년 북남관계 종지부」, 『조선중앙통신』, 2024.1.16.

138) 「김정은 동지께서 제2경제위원회산하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4.5.13.

‘학습효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¹³⁹⁾ 또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루스탐 우메로우(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으며, 러시아 내에 북한군 주둔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과병된 북한군의 전투 경험이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¹⁴⁰⁾

2.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 및 과제

가. 중국

(1)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향후 전망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이하 ‘트럼프 2.0’)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를 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트럼프 1.0 때에도 이러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 2018년 8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취소한데 대해, 당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강한 무역 방침 때문에 비핵화를 돕지 않는다. 미중 무역관계(마찰)가 해결된 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능하다”며 중국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미중 간 대한반도 정책에서 공조에서 한계가 노정되어 왔던 것을 방증한다.¹⁴¹⁾

2022년 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간 시각차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진핑

139) 고도예, 「북, 러에 신형 미사일 60기·발사대 공급... 실전 성능 실험해」, 『동아일보』, 2024.5.22.

140) 이명동, 「서울 찾은 우크라이나 국방 "북한 과병군 전투 경험 한국에 큰 위협」, 『뉴시스』, 2024.11.28.

141) Mike Pence,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2018.10.4.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하고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하며 진정성을 담은 발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024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역내 정세 문제와 양국 간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세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보는 일부 시각과 관련하여, 미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활용하려 하지만 중국에는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중국은 유럽 주요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협력하는 삼각구도가 되면 유럽은 중국을 러시아 지원국으로 볼 것이므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중국과 소통해야 하며, 이 삼각구도가 동북아 신냉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중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⁴²⁾

한편 북한과 중국 관계의 ‘회복력(resilience)’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유엔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후 중국에 대한 북한

142) 김미경, 「미중 갈등 양면성 있어… 사안별 접근으로 국익 챙겨야」, 『디지털 타임스』, 2023.6.29.

의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중국은 식량, 의류, 비료, 기계, 건축 자재 등 북한 주민과 북한 산업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필수품을 공급하며 북한의 생명줄이 되었다. 1994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 조약으로 양국 간 무역은 확대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2023년 중국은 북한 사회 무역량의 98%를 차지하기도 했다.¹⁴³⁾

(2) 시사점 및 대응 과제

이상과 같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한반도 3원칙’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쌍궤병행’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해 국경 지역의 혼란 등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마지노선(底线)’으로 설정하여, 단호한 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6자회담 등 다자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선호하고, 북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트럼프 2.0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 국제환경 변수로 인해 각자도생의 시대에 직면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점차 요원해질 것이 우려된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고, 한국이 대화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북핵 문제의 논의와 해결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하며, 우리의 역할이 경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43) Lee Hee-ok, Sungmin Cho, “China Should Be Worried About North Korea-How to Make Beijing a Partner in Restraining Pyongyang”, *Foreign Affairs*, 2024.11.12.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와 소통도 이어가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일본

(1) 국내 정세 변화와 대한반도 정책

2024년 9월 2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제28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10월 1일 제102대 이시바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38년의 의원 경력과 방위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전문가로서 안보를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시바 총리는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기고를 통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¹⁴⁴⁾

여기서 이시바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엔 집단안보체제의 한계가 드러났으나, 집단안보체제가 없는 아시아에서는 상호 방위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 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버전의 NATO 결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동맹에 대한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 버전의 NATO에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NATO의 창설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외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은 헌법에 따라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완전히 이

144) Shigeru Ishiba, 「Shigeru Ishiba on Japan's New Security Era: The Future of Japan's Foreign Policy」, Hudson Institute, 2024.9.25.

루어질 수 없으며, 유럽과 달리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유사한 틀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⁴⁵⁾ 더욱이 중국과 관계가 깊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시바 총리가 한일 역사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2024년 발간된 저서 『보수 정치가 이시바 시게루 - 나의 정책 나의 천명』(保守政治家 わが政策、わが天命)에서 이시바 총리는 ‘합병이 얼마나 상대국 국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한일간의 진실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기술한 바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는 ‘식민지배의 합법성’,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서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종결’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 기조가 있고, 이시바 총리의 약한 당내 기반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 과거사 관련 현안에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¹⁴⁶⁾

실제로,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제50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215석을 확보해 중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고,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46%로서 정권출범 대비 5% 하락하였다.¹⁴⁷⁾ 2025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과거 2000년대 초와 같이 일본의 총리 임기가 1년여에 불과했던 불안정한 시기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5) 神保謙, 「アジア版NATO 地位協定改定実現可能?」, 『朝日新聞』, 2023.10.2.

146) 박명희, 「이시바 내각 출범,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변화는?」, 『이슈와 논점』 제22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147) 「日経世論調査 全データ」(최종검색일: 2024.11.18.),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abinet-approval-rating/>>.

한편, 이시바 총리의 북일관계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바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납치피해자의 조기 귀국 및 북한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구상을 오랜 기간 밝힌 바 있다.¹⁴⁸⁾ 최근 일본 정부는 2025년 1월 트럼프 2.0의 출범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호기(好機)로 판단하고, 트럼프 정권에 납치피해자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¹⁴⁹⁾

(2) 대응과제

이상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25년 1월 트럼프 2.0 출범 후 지역의 안보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양국에 막대한 손해가 부과될 경우 양국이 협력하여 미국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트럼프 2.0 출범 후 주한·주일 미군의 주둔경비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¹⁵⁰⁾은 2027년 3월에 종료된다. 존 볼튼(John Robert Bolton)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기존 일본 측 분담금의 4배 이상인 80억 달러(약 8,500억 엔)에 달하는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에도 공화당 내

148) 衆議院議員 石破茂, 「石破茂の政策」(최종검색일: 2024.10.5.), <<https://www.ishiba.com/policy/>>.

149) 「トランプ政権に拉致再提起へ日本政府 膠着打開にらむ」, 『日本経済新聞』, 2024.11.23.

150) 정식명칭은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第二十四条についての特別の措置に関する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임.

에서 일본 GDP 대비 3% 정도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둘째, 2018년 강제동원피해자 문제관련 대법원 판결이후 역사문제로 시작된 양국 간 갈등이 안보, 경제 관계로 확대된 것 등으로 비추어볼 때, 양국 간 과거사 관리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우리 정부 주도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 발표에 따라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관련 해법에 대한 국내적 평가가 높지 않고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임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를 불안하게 전망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양국 간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가 중요하나, 역사문제가 현실에서 과대 대표 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핵·미사일 문제와는 별도로 납치피해자 문제가 존재하는 북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북한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1.0 당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간극이 컸다. 하지만,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에서는 한미일 3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고, 북한과 전제 없는 대화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등 입장이 수렴한다. 이시바 총리가 납치 피해자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협상 여하에 따라 북일 양자관계의 개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일 간 대화에 반대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와의 사전 협의 없이 북일 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향후 대북문제 관련 한일, 한미일 협력에 영향이 불가피한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러시아

(1) 북러관계

러우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북러 관계 강화는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등 최첨단 안보 기술을 지원 받게 되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북러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경우 러시아와 북한의 체제 안정성이 견조해질 우려도 있으므로, 양국의 경제 협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북러 경제 협력이 일시적이며, 북-중 관계를 대체할 만큼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례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연평균 33.2억 달러였으나, 대러 무역 규모는 1.2억 달러로 차이가 컸다. 더구나 최근 북러 경제 협력은 에너지, 식량 등 제한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¹⁵¹⁾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자간 제재 협력, 제3국과의 협력 강화, G7 및 G20 등 국제회의에서 북러 경제 협력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의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한러관계

러우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양국 간 안보·경제 관계는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151) 이종규, 「북한경제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KDI 북한경제리뷰』, KDI, 2024.11, pp. 3-23.

않도록 유의하고, 투자한 한국 기업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북러 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다차원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함으로써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러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투자한 기업 등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제 교류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러우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서방의 에너지 대러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러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와 재생 가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 관하여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과학기술,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으며, 특히 바이오, 의료, 정보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V. 결론

이상에서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국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저마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해왔다. 근래의 미중경쟁의 심화와 러우전쟁의 지속은 각국 간 협력과 갈등을 통해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라는 진영화의 양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영화는 과거 냉전시기의 견고한 진영 대결과는 달리 완벽히 분리된 형태가 아니며, 한미일과 북중러 진영 내에서도 불안정한 요소가 내재되어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0 출범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를 고려하면, 이러한 진영화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논하기는 상당히 요원하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는 남북관계의 근원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즉 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인식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평가하고 이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대남 및 대미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감행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25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0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핵동결을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협상이 북한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적대적 남북관계를 국면전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0에서는 러우전쟁과 중동전쟁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할 경우 북한과 성급한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체제’(NPT)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북한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활용하여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선뜻 북미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고, 주변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대북한 및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대응전략을 시급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0의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 강부균, 「최근 한-러시아 교역 동향과 시사점」, KIEP, 2024.6.7.
- 고도예, 「북, 러에 신형 미사일 60기·발사대 공급... 실전 성능 실험해」, 『동아일보』, 2024.5.22.
- 국가정보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보도자료)」, 2024.10.18.
- 국방부,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보도자료)」, 2024.2.14.
- 권호·정영교, 「북 김여정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의 극치”」, 『중앙SUNDAY』, 2022.8.20.
- 기미야 다다시, 「한일 관계의 대칭성과 상호협력 방안」, 『JPI PeaceNet』 2023-03, 제주평화연구원, 2018.3.8.
- 김도희, 「한미 대북정책의 내용과 쟁점: 위기의 고조와 기회의 모색」, 『이슈와 논점』 제196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7.4.
- _____,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시대의 전망과 과제」, 황재호 편,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동인과 변인 그리고 미래』 (서울: 이담북스), 2024.
- _____, 「트럼프 2.0 ②: 방위비 분담금과 퍼펙트 스톱」, 『이슈와 논점』 제231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12.20.
- 김미경, 「미중 갈등 양면성 있어... 사안별 접근으로 국익 챙겨야」, 『디지털 타임스』, 2023.6.29.
- 김한경, 「한미, 북 핵공격 대응 가이드라인 담은 ‘공동지침’ 작성 사실상 완료」, 『뉴스투데이』, 2024.6.10.
- 김현욱, 「[기고] ‘새 시대’를 맞은 한미일 협력」, 『동아일보』, 2023.8.21.
- 나세웅, 「북한 유엔대표, 러시아 파병설에 “근거없는 소문” 부인」, 『MBC』, 2024.10.22.
- 노민호, 「파병으로 선 넘은 북러 군사 밀착...중은 ‘북중러 거리두기’ 이어갈 듯」, 『뉴스1』, 2024.10.20.

- 대통령실, 『워싱턴선언』, 2023.4.26.
- 대통령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2024.7.11.
- 류재민, 『푸틴, 김정은과 군사협력 논의..인공위성 개발 도울 것』, 『조선일보』, 2023.9.13.
- 문병기·신진우, 『트럼프 정권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동아일보』, 2024.11.28.
- 박광연, 『한·미 정상 “북한과 외교 의지 재확인”...대화·협상과 거리 먼 현실』, 『경향신문』, 2023.4.27.
- 박명희,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NARS 입법정책보고서』제14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 _____,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일본 내 평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제214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 _____, 『이시바 내각 출범, 일본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변화는?』, 『이슈와 논점』제228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 박민희, 『시진핑식 푸틴 활용법, ‘친러중립’의 복합방정식』, 『한겨레』, 2024.7.2.
- 박현주, 『“두개의 전쟁” 속 대선 치르는 바이든, ‘중간단계’ 연일 강조 의도는 ... “北 오판 경계” 우려도』, 『중앙일보』, 2024.3.6.
- 박형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1년...“외교적 접근 긍정적이거나 구체적 행동 결여”』, 『VOA』, 2022.4.29.
- 선즈화(沈志華), 『중북 불신의 역사적 뿌리』, 『성균차이나브리프』 vol.43, 성균중국연구소, 2017.
- 손열,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국제정치논총』 58:2, 2018.
- 안준호, 『전문가들 “중국,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대북정책엔 변화 없을 것”』, 『VOA』, 2024.7.31.
- 옥승욱,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및 도상연습 연기...비상계엄 여파인 듯』, 『뉴시스』, 2024.12.4.

- 윤석정, 「북·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정상회담을 둘러싼 움직임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1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 이동규·김지연, 「북러 군사밀착과 중국: 북중러 3각 연대로 나아가는가?」, 『이슈브리프』 2023-29, 아산정책연구원, 2023.12.20.
- 이래현, 리차드 김, 「북러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4조 조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BBC*, 2024.6.20.
- 이명동, 「서울 찾은 우크라이나 국방 "북한 파병군 전투 경험 한국에 큰 위협」, 『뉴시스』, 2024.11.28.
- 이민아, 「합참, 북 9·19 3600여회 위반..더는 완충수역 존재않아」, 『조선일보』, 2024.1.8.
- 이민영, 「한미정상, 핵억제·핵작전 공동성명...미 3대 전략 핵무기 상시 배치」, 『서울신문』, 2024.7.12.
- 이세진, 「시진핑·푸틴, 北 두둔 한목소리...“美-동맹국, 대북위협 반대」, 『채널A』, 2024.5.17.
- 이승열, 「북러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이슈와 논점』 제225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 이승현·김도희·김예경·심성은·박명희·이승열, 「[국회연구조정협의회공동연구]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미래연구원, 2023.12.
- 이종규, 「북한경제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KDI 북한경제리뷰』, 2024.11, pp. 3-23.
- 임수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이슈브리프』 제62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11.7.
- 정민현, 강부균, 민지영, 김원기,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KIEP*, 2024.8.1.
- 정재홍·이동민, 「새로운 국제 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세종정책브리프』 2023-17, 세종연구소, 2023.12.11.

- 조상진,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 북한에 핵·미사일 기술 지원…미한 안보 위협”』, *VOA*, 2024.12.4.
- 조성하, 『[중러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중 9600자, 영 4만 3000자로 “반미연대” (종합)』, 『뉴시스』, 2023.3.22.
- 조양현,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 미국의 동맹관리의 시각에서』, 『정책연구시리즈』 202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 조양현, 『트럼프 당선 이후 미일관계 전망』, 『IFANS FOCUS』IF2024-19K,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11.
-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 2022.11.
- 최인영, 『러 국방 "북한과 연합훈련 개최 논의…이웃인데 왜 안되겠나』, 『연합뉴스』, 2023.9.5.
- 한국무역협회, 『작년 북한 경제성장률 3.1%…코로나19 완화 덕 4년 만에 성장』, 2024.7.26.
- 한동호 외,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KINU 정책연구시리즈』 22-04, 통일연구원, 2023,
- 함지하, 『미 국무부, 러시아의 무기 거래 부인 일출, 북한 무기 거래 시도 폭로할 것』, *VOA*, 2023.10.28.
- _____, 『정 박 인터뷰 “북한 ‘무기 진전’ 우려…‘위험 감소’ 논의 가능”』, *VOA*. 2024.3.20.
- 홍현익, 『트럼프 시대 미·중·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경기: 세종연구소, 2020.10.30.
-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 4. 13.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대회 관련 보도』, 『로동신문』, 2021.1.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중앙통신』, 2020.6.2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1.1.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

- 신문』, 2021.1.9.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10.1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 『로동신문』,
2022.12.27.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3.1.1.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문」, 『로동신문』,
2023.12.31.
- 「김정은 동지께서 제2경제위원회산하 중요국방공업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
시였다」, 『로동신문』, 2024.5.13.
- 「군사정찰위성발사시 사고 발생」, 『조선중앙통신』, 2023. 5. 31.
- 「전쟁준비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데 대한 문제」, 『조선중앙통신』, 2023.8.10.
- 「80년 북남관계 중지부」, 『조선중앙통신』, 2024.1.16.
- 「화성-19형 시험 발사 관련 보도」, 『조선중앙TV』, 2024.10.31.

- Abhishek Sharma, The Growing China-North Korea-Russia Axis and South
Korea's Response, *Diplomat*, 2023.10.6.
- Alana Wise, “White House Says It Is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npr, 2021.4.30.
- Alana Wise, “ Biden Appoints Career Diplomat Sung Kim To Serve As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npr*, 2021.5.21.
- Atlantic Council, “Experts react: The US-Japan-South Korea summit was ‘historic.’
But what did it accomplish?”, 2023.8.18.
- Bertrand, Natasha, “North Korea likely to ask for nuclear technology from Russia
in exchange for troops, South Korea says”, *CNN*, 2024.10.30.
- Betsy Klein, Biden administration completes North Korea review process, will
pursue ‘calibrated’ diplomacy, *CNN*, 2021.4.30.

- Crane, Emily, “Russia loses 2,030 troops in 24 hours – highest death toll in a day, Ukraine says”, *New York Post*, 2024.11.29.
- C-Span, Campaign 2024 Former President Trump Interview with the Economic Club of Chicago(Full text), 2024.10.15.
- Daniel Dale, Fact check: Trump makes at least 19 false claims in one-hour Fox town hall with women, *CNN*, 2024.10.16.
- David Pierson and Choe Sang-Hun, “Russia and North Korea’s Defense Pact Is a New Headache for China,” *The New York Times*, 2024.6.20.
- Department of State, Julie Tuner,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2023.10.13.-Present(최종 검색일: 2024.7.4.), <<https://www.state.gov/biographies/julie-turner/>>.
- Ebel, Francesca, “Russia is shipping very old tanks west, signaling shortage in Ukraine”, *The Washington Post*, 2023.3.23.
- Global Times, “China, Russia won't mind US attitude to enhance strategic consultations,” *Global Times*, 2023.9.18.
- Global Times, “China, Russia won't mind US attitude to enhance strategic consultations,” *Global Times*, 2023.9.19.
- GOP, The 2024 Republican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2024. 7.8.
- Hee-ok, Lee and Sungmin Cho, “China Should Be Worried About North Korea-How to Make Beijing a Partner in Restraining Pyongyang”, *Foreign Affairs*, 2024.11.12.
- Heritage.org., Project 2025 Publishes Comprehensive Policy Guide,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 2023.4.21.
- Howell, Edward, “North Korea and Russia’s dangerous partnership”, Chatham House, 2024.12.4.
- International Crisis Group, “城门失火：中国为什么与朝鲜保持密切关系(Fire on the City Gate: Why China Keeps North Korea Close)”, International Crisis Group, *Asia Report*, no. 254, 2013.

- Kim, Ellen, “Seoul-Moscow Relations on a Dangerous Slippery Slope”, CSIS, 2024.2.22.
- Lisa Curtis, Evan Wright and Hannah Kelley, “Forging a New Era of U.S.-Japan-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The Key to a Stable, Secure Indo-Pacific”,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2024.3.21.
- Lozovenko, Tetiana, “Russia loses over 2,000 tanks in war against Ukraine - Oryx monitoring group”, *Ukrainska Pravda*, 2023.5.29.
- Mark E. Manyin, et. al., “U.S.-North Korea Relations”, *IN FOCUS* IF1024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4.24.
- Maggie Haberman, Shane Goldmacher and Jonathan Swan, “Following Trump’s Lead, Republicans Adopt Platform That Softens Stance on Abortion”, *New York Times*, 2024.7.8.
- Nikitin Mary, Mark Manyin, and Andrew Bowen, “North Korea-Russia Relations: Current Development,” *INSIGHT* IN1235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4.5.6.
- Pence, Mike,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Hudson Institute, 2018.10.4.
- Pierson David and Choe Sang-Hun, “Russia and North Korea’s Defense Pact Is a New Headache for China,” *The New York Times*, 2024.6.20.
- Robert Peters, “The Potential for Russia to Supercharg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e Heritage Foundation, 2024.10.22.
- “Russia Refuses To Say If N.Korean Troops Fighting Against Ukraine”, *Barron’s*, 2024.11.8.
- “Russian soldiers killed in Ukraine, weekly estimates”, *The Economist*, 2024.7.5.
- Schmitt, Eric, “September Was Deadly Month for Russian Troops in Ukraine, U.S. Says”, *The New York Times*, 2024.10.10.
-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Books, Monographs & Collaborative Studies, 773, 2004.

Shigeru Ishiba, 「Shigeru Ishiba on Japan's New Security Era: The Future of Japan's Foreign Policy」, Hudson Institute, 2024.9.25.

Starchak, Maxim, “Russia’s maxed-out arms makers face labor, tech shortages”, *Defense News*, 2024.2.22.

Stephen P. Mulligan, International Agreements (Part I): Overview and Agreement-Making Process, *Legal Sidebar* LSB1104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3.9.2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12.

The White House, Joint Press Statement on Nucl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2023.12.16.

U.S. Department of State. Dr. Jung H. Pak(최종 검색일: 2024.7.4.), <<https://www.state.gov/biographies/jung-h-pak/>>.

防衛省, 『令和6年 防衛白書』, 2024

毕晓哲, 「“不允许在中国家门口生事”告诫一语双关」, 『国际在线』, 2013年4月7日.

外務省, 『令和6年 外交青書』, 2024

李敦球, 「年内发布朝鲜半岛“终战宣言”值得期待」, 『中国青年报』, 2018年10月17日.

肖 勇, 「“不允许在中国的家门口生事”看点在哪?」, 『中国网』, 2013年4月7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同美国总统拜登在利马举行会晤」, 2024年11月17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8年4月19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7年8月15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接受路透社专访谈叙利亚和半岛核问题」, 2016年2月13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会见韩国外长赵兑烈」, 2024年7月26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王毅会见韩国外长赵兑烈」, 2024年9月29日.

- _____, 『中国该如何应对朝鲜新核试』, 『环球网』, 2017年9月3日.
- _____, 『王毅：朝鲜半岛就在中国家门口 绝不允许生战生乱』, 『中国新闻网』, 2014年3月8日.
- _____, 『王毅谈安理会最新涉朝决议:遏阻朝核导开发与尽快恢复和谈, 两者不可偏废』, 『新华网』, 2017年8月6日.
- _____, 『没有中国, 半岛终战宣言无效! 可随时推翻』, 『环球时报』, 2018年6月4日.
- _____, 『王毅：发表半岛终战宣言符合时代进步潮流』, 『新华网』, 2018年8月2日.
- _____, 『外交部发言人陆慷主持例行记者会』, 2019年2月27日.

NARS 입법·정책 발간 일람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01호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 2018. 03. 13. | 허석재 |
| 제002호 |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 2018. 05. 31. |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
| 제003호 |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 2018. 06. 22. | 문은희 |
| 제004호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18. 06. 28. | 류영아 |
| 제005호 |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 2018. 07. 11. | 김종갑 |
| 제006호 |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 2018. 07. 26. | 조서연 |
| 제007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2018. 08. 08. | 조주은 최진응 |
| 제008호 |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2018. 09. 21. | 허민숙 |
| 제009호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 2018. 11. 15. |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
| 제010호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 2018. 11. 29. | 김유향 김나정 |
| 제011호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018. 11. 29. | 신동윤 |
| 제012호 |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018. 12. 07. | 권성훈 |
| 제013호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 2018. 12. 10. | 김태엽 |
| 제014호 |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 2018. 12. 11. | 이만우 |
| 제015호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 2018. 12. 13. | 박선권 |
| 제016호 |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 2018. 12. 13. | 정준화 |
| 제017호 |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 2018. 12. 14. | 김현정 |
| 제018호 |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 2018. 12. 14. | 김진수 |
| 제019호 |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018. 12. 17. | 허민숙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20호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 2018. 12. 19. | 김도희 |
| 제021호 |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 2018. 12. 20. | 정민정 |
| 제022호 |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 2018. 12. 24. | 박재영 |
| 제023호 |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 2018. 12. 27. | 김예경 |
| 제024호 | 난민심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2018. 12. 27. | 백상준 김예경 |
| 제025호 |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 2018. 12. 31. | 이승현 |
| 제026호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 2019. 01. 18. | 김창호 |
| 제027호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019. 09. 24. | 류영아 |
| 제028호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2019. 10. 31. | 박선권 |
| 제029호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2019. 11. 01. | 최미경 최정민 |
| 제030호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 2019. 11. 15. | 장은덕 |
| 제031호 |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 2019. 12. 10. | 김진수 |
| 제032호 |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019. 12. 16. | 박재영 |
| 제033호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 2019. 12. 19. | 김은진 |
| 제034호 |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19. 12. 23. |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
| 제035호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 2019. 12. 24. |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
| 제036호 |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 2019. 12. 26. | 이혜경 |
| 제037호 |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 2019. 12. 26. | 구세주 |
| 제038호 |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2019. 12. 27. | 백상준 |
| 제039호 |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 2019. 12. 27. | 박명희 |
| 제040호 |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2019. 12. 31. | 김도희 |
| 제041호 |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9. 12. 31. | 황현영 |
| 제042호 |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19. 12. 31. | 문은희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43호 |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 2019. 12. 31. | 강 지원 조 영은 |
| 제044호 |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 2020. 05. 22. | 허 민 속 |
| 제045호 |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20. 05. 30. | 전 진 영 |
| 제046호 |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 2020. 06. 24. | 신 동 윤 |
| 제047호 | 철도 유희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2020. 06. 30. | 구 세 주 |
| 제048호 |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 2020. 06. 30. | 김 예 성 하 혜 영 |
| 제049호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 2020. 07. 10. | 김 창 호 |
| 제050호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8. 07. | 김 예 성 |
| 제051호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2020. 08. 13. | 박 선 권 |
| 제052호 |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8. 28. | 김 예 경 |
| 제053호 |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 2020. 09. 01. | 허 석 재 |
| 제054호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 2020. 09. 01. | 김 종 갑 허 석 재 |
| 제055호 |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9. 07. | 정 준 화 |
| 제056호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9. 18. | 박 혜 림 |
| 제057호 | 한반도 주변 경계미확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 2020. 09. 21. | 정 민 정 |
| 제058호 |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2020. 10. 07. | 장 영 환 |
| 제059호 |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 10. 08. | 김 종 규 |
| 제060호 |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 2020. 11. 26. | - |
| 제061호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2020. 12. 04. | 허 민 속 |
| 제062호 |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 2020. 12. 21. | 김 진 수 |
| 제063호 |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 2020. 12. 23. | 김 봉 주 |
| 제064호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020. 12. 29. | 박 연 수 |
| 제065호 |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 2020. 12. 30. | 장 경 석 송 민 경 |
| 제066호 |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 2020. 12. 30. | 박 준 환 김 규 호 |
| 제067호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 2020. 12. 30. | 최 진 응 |
| 제068호 |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 2020. 12. 30. | 전 진 영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69호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 2020. 12. 31. | 신 용 우 |
| 제070호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020. 12. 31. | 김민창 박성용 |
| 제071호 |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2020. 12. 31. | 이송림 한경석 |
| 제072호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2020. 12. 31. | 김광현 이재영 최정인 |
| 제073호 |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2020. 12. 31. | 박명희 |
| 제074호 |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 현황과 과제 | 2020. 12. 31. | 이혜경 |
| 제075호 |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 2020. 12. 31. | 김경민 |
| 제076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2021. 03. 31. | 김형진 박영원 |
| 제077호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 2021. 05. 10. | 최은진 강지원 |
| 제078호 |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 2021. 05. 20. | 박선권 |
| 제079호 |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 2021. 06. 04. | 허민숙 |
| 제080호 |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 2021. 06. 17. | 류영아 |
| 제081호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 2021. 06. 30. | 이덕남 최재은 |
| 제082호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21. 07. 13. | 김예성 |
| 제083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 2021. 08. 19. | 이덕남 유지연 최재은 |
| 제084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21. 09. 29. | 류영아 |
| 제085호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021. 10. 19. | 하혜영 김예성 |
| 제086호 |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 2021. 10. 22. | 전진영 최정인 |
| 제087호 |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 2021. 10. 25. | 유재국 |
| 제088호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 2021. 11. 08. | 김예성 |
| 제089호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2021. 11. 15. | 김형진 |
| 제090호 |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 | 2021. 11. 18. | 정민정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91호 |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2021. 11. 25. | 이 만 우 |
| 제092호 |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 2021. 12. 01. | 김 진 수 |
| 제093호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 2021. 12. 02. | 유 의 정 조 인 식 |
| 제094호 |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03. | 김 경 민 |
| 제095호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06. | 박 소 영 |
| 제096호 |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 2021. 12. 07. | 장 영 주 김 규 호 유 제 범 |
| 제097호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15. | 최 정 민 |
| 제098호 |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2021. 12. 16. | 심 성 은 |
| 제099호 |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 2021. 12. 20. | 이 정 진 |
| 제100호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 2021. 12. 21. | 이 승 열 |
| 제101호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22. | 전 은 경 |
| 제102호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 2021. 12. 24. | 이 수 환 |
| 제103호 |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2022. 02. 23. | 황 인 옥 박 성 용 |
| 제104호 |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 방안 | 2022. 03. 29. | 정 준 화 |
| 제105호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 2022. 05. 12. | 김 예 성 하 혜 영 |
| 제106호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 2022. 05. 17. | 박 선 권 |
| 제107호 |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 | 2022. 05. 26. | 허 석 재 송 진 미 |
| 제108호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 2022. 06. 30. | 류 영 아 |
| 제109호 |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 2022. 08. 24. | 허 민 속 |
| 제110호 |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 2022. 08. 26. | 허 석 재 송 진 미 |
| 제111호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2022. 09. 28. | 하 혜 영 임 준 배 |
| 제112호 |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 2022. 10. 27. | 김 강 산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13호 |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2. 11. 14. | 김 지 민 |
| 제114호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2. 11. 23. | 최 은 진 |
| 제115호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2. 12. 05. | 김 주 경 |
| 제116호 |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 2022. 12. 08. | 오 창 룡 |
| 제117호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2. 12. 14. | 권 성 훈 |
| 제118호 |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 2022. 12. 21. | 조 인 식 |
| 제119호 |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 | 2022. 12. 26. | 이 승 열 허 석 재 |
| 제120호 |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22. 12. 26. | 김 광 현 |
| 제121호 |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2022. 12. 27. | 김 예 경 |
| 제122호 |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2. 12. 27. | 김 경 민 |
| 제123호 |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 2022. 12. 30. | 이 정 진 |
| 제124호 |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FGI 연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2022. 12. 30. | 최 진 응 |
| 제125호 |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해외국가와 국내 비교를 중심으로 | 2022. 12. 30. | 전 윤 정 |
| 제126호 |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2. 12. 30. | 김 나 정 |
| 제127호 |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 2023. 04. 25. | 박 준 환 |
| 제128호 |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2023. 08. 08. | 문 준 혁 조 규 범 |
| 제129호 |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 | 2023.08.14. | 정 민 정 |
| 제130호 |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 2023.08.22. | 김 선 화 김 보 람 원 시 연 장 경 석 오 창 룡 김 광 현 김 나 정 문 준 혁 |
| 제131호 | 동시입후보제 및 석패율제의 국내·외 입법 현황과 쟁점 | 2023. 10. 30. | 허 석 재 |
| 제132호 |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2023. 10. 31. | 배 재 현 |
| 제133호 |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법률전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 2023. 11. 16. | 정 민 정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34호 |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葬事)정책의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 2023. 11. 20. | 원시연 |
| 제135호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 2023. 11. 22. | 류영아 |
| 제136호 |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 2023. 12. 01. | 류호연 |
| 제137호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 | 2023. 12. 12. | 원시연 |
| 제138호 |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2023. 12. 13. | 전진영 오창룡 |
| 제139호 | 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 2023. 12. 18. | 박총렬 |
| 제140호 | 금산분리 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발의안의 동향과 쟁점 | 2023. 12. 21. | 최은진 박미영 |
| 제141호 |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 2023. 12. 22. | 허석재 |
| 제142호 | UN과 EU 제재 비교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2023. 12. 26. | 심성은 |
| 제143호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 2023. 12. 26. | 김형진 |
| 제144호 | 인터넷 투표제도 쟁점과 도입 방향 | 2023. 12. 26. | 송진미 오창룡 |
| 제145호 |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2023. 12. 27. | 박명희 |
| 제146호 |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 2023. 12. 29. | 유재국 박선권 |
| 제147호 |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2023. 12. 29. | 전윤정 |
| 제148호 | 방송사업자간 흡소평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 2023. 12. 29. | 최진응 |
| 제149호 |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 2023.12.29 | 이동영 |
| 제150호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 2024. 04. 24. | 정민정 |
| 제151호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 2024. 06. 28. | 류영아 |
| 제152호 |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 2024. 07. 18. | 허민숙 |
| 제153호 |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 | 2024.07.22. | 임재범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154호 | 프랑스 인구위기의 사회적 구성 및 가족정책의 시사점 | 2024.09.25. | 박 선 권 |
| 제155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선거과정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 2024.11.18. | 허 석 재 송 진 미 |
| 제156호 |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 2024.12.19. | 전 진 영 김 현 아 |
| 제157호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 | 2024.12.20. | 송 진 미 김 현 아 |
| 제158호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벌금형의 입법 방안 - 총액벌금제의 유지를 전제로 - | 2024.12.23. | 김 광 현 |
| 제159호 | 연성법(Soft law)의 활용 및 통제를 위한 입법방안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내서·매뉴얼을 중심으로 | 2024.12.24. | 김 형 진 |
| 제160호 |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방안 | 2024.12.24. | 이 수 진 |
| 제161호 |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2024.12.30. | 전 윤 정 |
| 제162호 |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 과제 - 데이터·기술·이용자를 중심으로 - | 2024.12.31. | 정 준 화 |

NARS 입법·정책 제163호

| | |
|-----|---|
| 발간일 | 2024년 12월 31일 |
| 발행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
| 편집 |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
|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4510 |
| 인쇄 | (주)케이에스엔씨에이션 (TEL 02·761·0031) |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보고서·발간물〉에서 국회의 각 입법지원 조직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발간물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865-14

© 국회입법조사처, 2024

NARS 입법정책

주요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代) www.nars.go.kr

